

인권정보자료실
R1.1.17

월간2면 발행, 일·월요일 제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인권하루소식

제1887호 ~ 제2006호

합본 17호
(2001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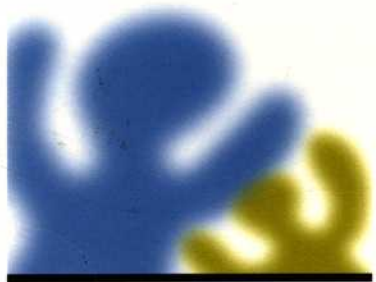
합본 17호

2001년
7월 ~ 12월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가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논의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상 4·3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것은 87년 6월 학생 이후 20년 가까이 4·3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4·3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열린 4·3 진실규명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4·3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여 년간 4·3을 규명하고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4·3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
R1.1.17

인권
운동
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①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②학생회칙: 학생회는 껌대기
- ③용의복장 규정: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④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도 복장 위반에 걸리게 되면 교문은 곧 지옥문이 된다.

머리가 길면 왜 안 돼요?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나 상고머리형 여학생의 경우 한갈래로 묶는 머리 △검정색 고무줄이나 고무밴드와 그에 크기와 굵기에 준하는 검정색 끈 △학생신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늬와 장식이 없는 보편적인 검정색 단화’

단벌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을 연상시키는 위의 규정은 200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용의복장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내용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청 게시판에서 글쓴이가 준 인 호고 학생은 “다음주 월요일에 규정에 맞지 않으면 머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머리가 길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단지 눈살을 찌푸리는 몇 사람 때문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규정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다.

‘학생다움’으로 행해지는 폭력

대부분의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는 ‘단정하지 못한’, ‘흉한’, ‘유행에 민감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들이 ‘학생신분에 맞는’이란 전제 하에 자리잡

고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학생다움의 기준이 달라 ‘고무줄 규정’에 불과하다. 어떤 학교에서는 구두를 신는 것이 학생답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하다. 결국 ‘학생다움’의 잣대는 학교에게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감압적인 규제를 의미할 뿐이다.

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수업시간에 느닷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머리를 자르고 나가시는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머리를 잘리는 느낌 아십니까?”라고 쓴 스고의 박00군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용의복장 규정에는 머리핀

의 길이와 굵기의 cm까지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세세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다. 심지어 속옷의 착용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다가 hana988인 한 학생의 항의처럼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상의속까지 검사하는 학교의 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공격과 침해이다.

결국 학교는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가 ‘강제적인 머리깎기’나 ‘속옷 검사’ 등의 무리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영원)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교, 종교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연석회의는 “이 사진은 이곳에 신고된 집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집회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진종합개발이 집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 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중복집회를 이유로 금지통보를 받았다.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는 대학교문화발전추진협의회 명의의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 이미 올해 말까지 신고되어 있다. 이에 9월 12일 민중연대는 청량리역에서 명동까지 4개 경찰서에 관통하는 대규모 행진을 계획한 집회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전국민중연대에 집회신고를 다시 하면 대학교 집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중복집회 금지제도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복신고된 경우 일단 두 단체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001년 11월

(제1966호-제198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일(목)

제 19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후 법관이 범죄인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지하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

는 견해도 많다"는 홍보자료를 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 확정·형미집행자는 모두 51명이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2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에 "자신의 죄과를 깊게 참회하고 교화 정도가 높으며,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수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제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도 반하고 법관과 집행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폐협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서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모두 87개국으로 폐지된 108개국 보다 오히려 적고, 폐지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이 사형 존속국에서 폐지국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태섭)

어린이와 함께 반전평화 서명을!

"전쟁은 왜하나요? 전쟁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총이나 폭탄에 등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아무리 테러는 나쁘지만.. 그거때문에 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죽는건 슬프지도 않나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진짜 테러를 저질렀다고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전쟁은 그림 속에 떡 이라고만 생각했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걸 재미있게 생각해서 게임 이턴가 그렇게 생각 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잘못해서 세계3차 대전이라도 되면 어떡해요? 재발 싸움은 그만 하세요." 월촌초등학교 3학년 3반 김지은 학생의 486번째 반전평화 서명이다. 종종 맞춤법이 틀리긴 하지만, 어린이들의 진솔한 반전평화 서명이 '어린이와 평화' 홈페이지(www.freechal.com/peace21)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어린이신문굴렁쇠 등 22개 어린이 교육·문화운동 단체들이 전쟁반대 서명을 벌이기 위해 지난 16일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24일 전쟁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서명과 더불어 전국적인 종이서명도 받고 있다. 겨레아동문화연구회 심명숙 씨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전쟁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전쟁반대 뿐만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운동 취지를 밝혔다. (법용)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지적"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선출 후 국가인권위 설립기획단은 시행령과 채용규정안을 마련해(10.12) 공청회를 열었다(10.30). 공청회에 초대받은 토론자 중 인권단체 활동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10.15), 정통부 부근에서 긴급 항의집회를 열었다(10.18). 공동행동은 이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통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노상철야단식에 돌입했다(10.22). 한편, 정통부는 욕설·비방 등을 이유로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아예 폐쇄해 버렸다(10.9).

3. 중·고교 교칙, 학생에 대한 존중보다는 제재가 목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부터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 △학생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을 중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0.22).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 분석 결과 발표문에서 "교칙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원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로 단체인 진보의료인 소속 회원 8명이 서울시경 흥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방향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10.23).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10.25). 이에 앞서 지난 8월 만경대 발안으로 구속된 강정구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10.11) 후, 첫 공판을 받았다(10.29).

5. 교도소 재소자, 보호감호 대상자에게 인권은 없다?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김 씨의 행정심판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불허한 사실이 밝혀졌다(10.17). 광주교도소 최 씨는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했다(10.17). 엠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임 씨와 이 씨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10.2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접견 도중 재소자 이 씨와 유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했다(10.24)

논평

-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10.6)
-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10.13)
-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0.20)
-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10.27)

인권이야기

- 광복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0.9/신윤동욱)
-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10.16/정욱식)
-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10.23/장여경)
-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10.30/김혜란)

기획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①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10.24)
- ②학생회에 학생참여는 없다(10.26)
- ③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돼(10.31)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10.11)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1·2(10.18)
- 프라이버시 핸드북(10.19)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10.25)

중요판결

-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 98년 한총련 손준혁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일(금)

제 19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1일 낮 12시 서울 종로2가 국제청 건물 앞 광장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제각각 다른 주장을 '목예견' 1인시위자 약 40명이 한 장소에 모인 것.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사립대 노동자 정년 보장하라" "장애인이 동권 보장하라" 등, 시위자마다 내건 주장도 달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물은 이 조항을 악용해 자기 건물 내에 대사관을 적극 유치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가 벌어진 광장 역시, 국제청 건물에 온두라스대사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되어온 장소다.

한편 낮 12시부터 '1인 시위자'가 하나둘씩 모여들자, 종로경찰서측은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은 "현 시위 양상이 즉각 해

산해야할 만큼 공공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형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권과 건물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시위참가자들이 '주변에서 휴식중인 시민'들을 가리키며 "저들이 과연 휴식권을 방해받고 있느냐"고 따지자, 경찰 관계자는 "나는 시민들이 불편·불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시간 동안만 시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더 이상 시위를 가로막지 않았다.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 예정

'50인50색 1인시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88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기획한 것으로, 10월 25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10월 30일 '위장집회현황 교발집회'에 이은 3차행동이다. 이와같은 직접행동 외에도, 연석회의는 자체적으로 집시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폐!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릴레이철야단식 12일째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11/2 단식자 : 서동진(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①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②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③용의복장 규정;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④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지난 6월 8일의 윤00군은 두발사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고 얻어맞다가 다음 날부터 독후감, 반성문, 그런거 쓰다가... 1주 근신에 3주 학교봉사라는 얘기만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윤 군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징계 결과만을 통고 받은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195개 학교의 선도규정을 분석한 결과 104개 학교가 징계 시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칙에 명시된 ‘진술 기회’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사전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요구권이 학생에게 보장된 학교는 2개, 학부모에게 보장된 학교는 3개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장에게 재심요구권이 주어진 학교는 138개이다. 징계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요구권이 징계권자인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체벌 전 질병 유무를 확인하라?

통상적인 징계단계(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 외에 107개 학교가 별도의 체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

신적 질병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교감 또는 교장의 사전허락, 부모나 학생의 체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벌은 다 른 학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체벌 후에 따로 불러 지도해야 한다.

체벌에 대한 찬반논의를 떠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규정이 과연 체벌에 대한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지켜지지도 않을 규정을 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불은, 불은, 불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행위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불순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행위에는 특별교육이나 퇴학의 중징계가 뒤따른다.

이밖에도 징계 사유에는 ‘불미스런’, ‘불건전한’, ‘학생답지 못한’ ‘물의를 일으킨’ 등의 표현을 남발하여 규제하고 있는 행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잘못이라고 판단된 행위의 유사성에 관계없이 징벌 내용이 학교마다 또는 한 학교 내에서조차 다른 경우가 많다. 최후의 징계수단이어야 할 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60여 개나 된다.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는 규율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율이 요구된다. 통제와 엄벌주의를 벗어나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영원]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희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표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행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중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라며,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활동가 1인의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성활동가는 요란한 전자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치마크 “卐”를 벽에 부착하고, 전기줄로 몸을 휘감은 상태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압살 당하는 상황을 상징한 것. 퍼포먼스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상징한 전기줄로 목을 옥죄 체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을 이어갔다. 오 사무국장은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이 단식투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유희매체를 표시하는 것과 내용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별개이고 내용등급 표시는 자율적인 방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3일(토)

제 19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노동자들이 대형미용실 사업주를 고발했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 ‘뽀앤컷’을 운영하고 있다.

미용서비스지부(지부장 정석철)가 속해있는 평등노조는 “뽀앤컷이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30~40만 원을 주는 등 노동자들을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뽀앤컷에 고용된 평등노조 조합원들과 평등노조는 사업주 강 씨에게 단체교섭을 수 차례 요구해 지난달 19일 첫 교섭을 했다. 그러나 강 씨는 “뽀앤컷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 “노동조건에 대해선 미용사중앙회와 협의해 보겠다”면서 그후로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자신이 고용한 미용서비스지부 부지부장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결국 부지부장은 자진 퇴사를 하게됐다.

임미령 위원장은 “미용서비스 노동자들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어 분명히 노동자 신분”이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명분 아래, 지분이 없어질 정도로 염색약을 만지면서도, 미용실 업주들

에게 끔찍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용서비스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12~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생리휴가·연장수당 등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라며, “헤어디자이너라는 빛 좋은 허울 아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관행들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용서비스지부는 지난 6월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준미장 △이철해어커커 △이가자미용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 대리전화되어 있는 4개 기성 대형미용실의 본질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고발당한 대형미용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심태섭]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오늘도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 학생의 날을 맞아 그들은 ‘여러분은 자랑스런 광주학생운동의 후예’라는 말을 조·종례 시간에 듣거나 기념식을 치를지 모른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랑스러움을 느낄지 씩씩함을 씹을지 궁금하다.

3·1운동 이후 가장 힘차고 격렬했던 독립운동으로 기억되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 그것은 단순히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에 대한 격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담당할 자신들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 람들의 행진이었다.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 철폐하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는 외침에 전국 1백94개교 5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참하여, 수백 명이 퇴학처분과 최고 5년에 달하는 구형을, 수천 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에게 ‘학생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직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등 당시 학생들의 격문에 실렸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다. 학생회 자치권과 학교운영위 참여를 외치는 목소리는 미미하나마 72년 전 선배들의 목소리와 닮아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학생들이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칙은 여전히 ‘불온한 사상, 정치행위, 반국가·반사회적 행위, 동맹휴학의 선전·선동’ 등을 퇴학사유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봉사활동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기능도 갖지 못하는 학생회, 징계시 소명기회와 재심요구권의 박탈, 손톱부터 속옷까지 제한하는 용의복장 규정 등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예는 허다하다.

학생은 학내 문제 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 즉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생각과 표현을 억압당한 학생들이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생의 날’이 기계적으로 암기되지 않고 제 주인 속에서 호흡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과도 거리가 먼 곳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사람 중 파편을 맞아 케타 병원에서 치료 중인 20세의 무슈페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11시쯤이었어요. 처음에, 비행기 한 대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집에 폭탄이 떨어져 죽게 될까봐 뛰쳐나왔어요. 좀 있다 몇몇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동생들 몇 명은 밖에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다시 와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남동생이 총에 맞는 걸 봤어요. 삼촌은 라이트를 끄려고 차로 뛰어갔죠. 그 때 차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

고 연거푸 폭격이 계속됐죠." 지난달 21일 아프간 내 여성단체인 라와(RAWA)는 수도 카불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미국의 공격으로 수도 카불 전역은 거대한 검은 포연으로 뒤덮여 있고, 폭격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그야말로 비탄의 도시다." 라와에 따르면, 피난민의 행렬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전기도 끊긴 상태다. 식료품 가격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살 돈이 없다. 정부는 식량배급을 4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였다.

라와가 만난 한 여성은 "작년에 탈레반 정권이 우리 마을에 불을 놓아 카불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폭격으로 허름한 집이 다 부숴졌다. 먹을 것도 없고, 몸을 피할 곳도 없다. 우리는 탈레반도 오사마도 원치 않는다. 근데 대체 우리 잘못이 뭐길래 미국은 우리에게 폭격을 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라와가 보고서를 쓰고 있던 21일 아침에도, 재개발지역에 큰 폭발이 일어나 한 가족 8명이 죽고 집 세 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편,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발표해 "미 관리들도 공격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음을 인정했으나 언론은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

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00 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김 씨를 군산교도소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던 5월 12일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8월 15일까지 김 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보류를 요청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6월 17일 사망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호할 수 있는 일시적 강제조치"라며, "보호 중이던 김 씨에 대하여 별도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통상 강제퇴거명령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노력 안성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시간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강제 출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했다. (범용)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던 진재영 씨(94년 전남 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1일 저녁 8시경 진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형사 6~7명에게 붙잡혔다. 이후 진 씨는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아래 보수대)로 넘겨졌고, 현재는 광주남부 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전남도경은 진 씨를 잡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 전남광주본부 민용기 조직부장은 1일 밤 11시 40분경 진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민 조직부장은 "경찰들이 진 씨 부모님과 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씨를 접견한 가족 중 한 명은 "보수대가 진 씨에 대해 한총련·범민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심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진 씨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해를 넘기며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진 씨는 농성단 단장으로 "이번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가족 품에 안기겠다"며, 모형감옥체험, 국보법폐지 서명운동, 정치수배해제 캠페인 등을 활발히 벌였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6일(화)

제 19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교장실 파손' 사건으로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던 '에바다 농아학교'(아래 에바다)가 10일만에 휴교령을 해제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에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에바다연대회') 측 인사들이 처음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새 이사회가 과거의 폭력과 혼미의 악순환을 끊고 '에바다 정상화'에 의 강한 의지를 보인 첫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 학교 파손은 지난 5월에도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 이유는 "교장 취임 반대"였다. 그러다가 8월 7일에 '에바다연대회'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새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에바다의 '기상도'가 서서히 바뀌어가던 중에 다시 지난 달 26일 교장실 파손사건이 일어나 휴교령이 내려졌던 것.

휴교령이 내려진 직후인 31일, 윤귀성 이사장을 비롯한 김철준·김용한 등 '에바다연대회의' 측 3명의 이사들은 경기도 평택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에게 학교 파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현 이사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학교 파손을 사주했음을 시사한다.

무기한 휴교령이 10일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이사들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즉 이들은 즉각 에바다를 방문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 및 교사·학부모 사이에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또한 "이후 수업

방해 행위가 있으면 제3의 장소라도 찾아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에바다는 △11월 5일 수업 재개 △이후 수업 방해 행위시 수업 거부 의사로 간주 △

상태 재발 시 농아원장 등 관리책임자 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문에 붙여 수업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 파손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수업에 들어간 에바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한 이사는 "지난 5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에바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사회가 가진 권한과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나가겠다"며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심태섭)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쩍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 동료는 치를 떨었다.

송수근 씨. 그는 지난 98년 삼성SDI(대표이사 김승택)에서 해고된 후 3년여 세월을 오로지 매아리 없는 "원직복직"을 외치며 달려왔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은 작년 6월 28일. 전국을 돌며 삼성해복투 집회에서 신들린 듯이 삼성의 악랄함을 규탄해대는 그를 삼성이 어찌며 여길 리 만무했다. 삼성에 의해 고소된 그의 '범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였다. 78일간의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의 '무모함'은 해고자들의 한과 울분 바로 그 자체였다. 변함 없이 집회장마다 모습을 보이는 그의 존재를 삼성은 당연히 '눈엣가시'로 여겼지만, 사실 그가 삼성으로부터 특히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는 따로 있었다. 98년 해고자들이 3년 동안 송씨를 중심으로 처절하게 싸워오면서 항상 해고 불만에 떠는 현직 사원들의 의식은 깨어났고, 최근에는 그들이 송 씨에게 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송 씨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 급기야 삼성은 재 고소. 노랫가락은 만날 불러대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였고 송수근 씨는 다시 철창 속에 갇히게 되었다.

"집회하는 곳마다 삼성SDI에서 나온 사람이 따라다니며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송 씨 고소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삼성해복투 김학권 씨는 삼성 측의 비열한 수법에 울화통을 터뜨렸다.

현재 송 씨는 울산 중부서에 수감되어 있다. 3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돼 구속됐으니 동료들의 걱정은 태산같다. (범용)

○ 신운동의 인권이야기 ○

낮선 길을 찾아 가보기

첫 번째 길은 당황스러웠다. 올 봄 어느 날. 미안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취재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은 인천지하철의 종착역 '동막'을 향하고 있었다. 동막역은 3D업종이 주를 이루는 중공공장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과 가까운 역이다.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 주변이 낯설었다. 얼마 남지 않은 승객들 중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탓이다. 문득 '안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동막역에 내렸다. 약속보다 조금 빠른 시간이다. 기다린다. 역내를 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다.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다. '헛, 나는 이토록 편견을 떨치지 못하는 인간이었군...'. 당황하는 나 자신에 실망한다. 내 몸 안에 녹아든 왜곡된 교육의 효과를 저주한다.

두 번째 길도 낯설긴 했지만, 당황하진 않았다. 11월 어느 주말 저녁. 안산역 앞의 국경 없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글 간판만큼 한자 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영문 간판도 가끔 보인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기 때문이다. 한참을 걸어도 한국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삼삼오오 짝지어 걸어가는 이주 노동자들과 스친다. 잘 웃고, 잘 떠든다. 어깨도 움츠린 기색이 없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이주 노동자들을 가끔 만나면서 내 몸에 새겨진 '거부감'을 조금 지운 듯하다. '익숙함이란 이토록 무섭군...'

세 번째 길은 언제나 유쾌하다. 주말 밤, 종로에서 23번 버스에 오른다. 23번 버스 노선은 주말 게이들의 동선과 겹친다. 오후 늦게 종로에서 만나서 밤늦게 이태원으로 향하는 길. 종각, 남영동 버스 정류장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진다. 대개 남영동을 지나면 게이들이 승객의 다수를 점한다. 섹슈얼리티의 다수와 소수가 잠시나마 역전되는 순간이다.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 목청껏 떠드는 잡담... 버스 안이 시끌벅적해진다. 옥타브 높은 남자들의 목소리에, 낯선 차림새에 몇몇 승객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어쩌다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다. '뭔가 불쾌한가 보군...'

단일 민족, 단일 정체성 사회로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이처럼 소수자와 다수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해방공간이 있다. 그 길 위에서 소수자들은 마음껏 유쾌하다. 진정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안산행 지하철이나 이태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볼 일이다. 거기에 숨쉬고 떠드는 구체적 그들이 있다. 자꾸 다니다 보면 낯선 길도 익숙해지는 법. 마음이 향해 있다면, 멀지 않은 길이다.

「한겨레 21」 기자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러낼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드러내 (10/30)

2.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만 말고 통과까지
국회의원 155명,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 (10/30)

3. 국가보안법, 너는 '불항'도 없니?
국보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수배생활 해온 진재영 씨 (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광주도경 보안수사대 연행 (11/1), 1993년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 (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 (11/4)

4. 인터넷 정보, 이제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 (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서비스' 시범 제공하겠다" 12월 이후 유료화 방침 (11/2)

5. 40인 40색,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1인시위 '돌!'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종로 국제청 건물 앞, 제각기 다른 주장을 목에 건 40여명의 1인 시위자들 공동행동 벌여. "외국공관 등 반경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에 맞서라" (11/2)

6. 비정규직 75%가 저임금 계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 "월 100만원 이하 저임금 계층이 전체 노동자 절반 넘고 (52.1%) 비정규직은 4명 중 3명이 저임금 계층" (11/1), 한국통신 비정규직 3명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며 기습시위 후 연행 (10/31), 연행자 전원에게 구속영장 발부 (11/2)

7. 사고사·돌연사... 아동권 보장 정책 실종
127명에 달하는 청소년 사상자를 냈던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2주기. 부상자·유가족들은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고 후 인천시 등이 발표한 '청소년보호육성 종합계획'은 실현된 것 거의 없어 (10/30), 보건 당국 감독 사각지대인 산후 조리원에서 신생아 돌연사, 경찰과 당국이 조사 착수 (10/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7일(수)

제 19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무심코 찍었던 열 손가락 지문. 그러나 이때 '열 손가락 지문이 찍힌 신청서 원본'(십지지문 원지)이 경찰청에서 보관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로부터 십지지문원지를 반환받으려는 운동이 벌어져 주목을 끈다.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에 대해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제공한 십지지문의 원지가 수시로 범주수사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만17세 이상의 국민 전부를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여 모든 국민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윤현식 씨는 "국민들은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 지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고지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약 1백여 명이 십지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평했다. 이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일

단 문제점을 느끼면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1일 전남대학교에서 다류 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쫓아라'가 상영

된 후, 관객 40여 명 중 22명이 즉석에서 청구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쫓아라'는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감독이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을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토대로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작품.

이 소식을 접한 경찰청 과학수사과 지문계 관계자는 "지문은 비록 개인의 것이지만 일단 지문을 찍게 되면 십지 지문원지는 공문서가 된다"며,

(=> 2면으로 이어짐)

<인터뷰>(가칭)비정규직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전체노동자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 노동자. 하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발족하는 '(가칭)비정규직폐연대(준)'의 문제의식을 들어본다.

◎ 왜 비정규직 문제에 천착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수치적으로도 노동대중의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후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존재다."

◎ (가칭)비정규직폐연대(준)의 가장 큰 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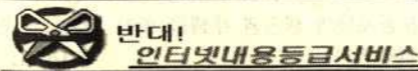
"비정규직 투쟁이 광장히 격렬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해당 주체들만으로 고립된 채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로 확산되지 못했다. 비정규 투쟁을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전국적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 첫번째 목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 목표다."

◎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과?

"비정규직 문제는 작년 민주노총 차원의 과제로 받아들여졌고, 각종 단체들이 공대위라는 틀로 결합하고 투쟁했다. 하지만 공대위라는 틀로는 지역 조직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운동의 성과가 소통되거나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다. 이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단체·지역을 넘나들며 투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당면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역조직을 세워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를 가지고, 당면 비정규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파견제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불법파견이 많이 일어나는 노조와 함께 불법파견 사업장들을 고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사회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다." [법용]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릴레이철야단식 17일째

오늘의 단식자 :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이어 17일에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반감시킬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등이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애초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

우선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는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희생자인 비정규·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더욱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 및 1천인 이상 사업장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교육부문 및 50인 이상 사업장→전사업장 순으로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도 모자라 지난 달 17일의 '합의초안'은 2010년까지 8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비정규·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은 가장 나중에 주5일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초기에 노동시간 단축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들에 떠넘겨 결국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업무의 분사화·하청화·용역화를 확대해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가장 길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한도는 2주 단위일 때 주48시간, 1개월 단위일 때 주56시간이다. 이때 단위기간 내의 총 노동시간을 평균해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한 주는 12시간씩 4일간 일하고, 다른 주는 12시간씩 3일, 4시간씩 1일 일을 시켰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시간이며, 한 주에 최장 48시간까지 일을 시킨 셈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하루 8시간 노동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아 97년 도입 때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논의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유통·서비스산업과 주문생산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한다.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상한선을 20일로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만들면, 실 노동시간을 목표치인 연 2천 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이럴 바에야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중단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이같은 노동자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6일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마후교섭이 진행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주영]

(=> 1면 '지문날인' 기사에서 이어짐)

"개인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문서에 대해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9일까지 십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인을 모집한 후, 다음주 중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이들의 굳은 결의다. [범용]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을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관련자 53명 등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자가 31명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정부 집권 4년간의 구속 노동자가 모두 6백68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간의 6백32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수치가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민주당 정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8일(목)

제 19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원칙 없는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신청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신청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이란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은 이번 보호조치와 추방이 '뉴욕테러'와 '아프간 사태' 이후 취해진 것이라며, 이러한 단속이 아랍계 사람들에게만 두드러진 현상에 대해 "분명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난민신청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와 김00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신청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계장은 또 이

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데다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난민의 인정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난민신청신청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단지 출입국 차원의 문제 혹은 단속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행정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범용]

클릭 인권정보자료(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 소개)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 : 지역별 1인당 주거평균 면적-한국과 외국의 비교
- : 2001년 현재 극빈층 주거 실태
- : 전 가족 단칸방 거주 현황
- :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 주택점유 형태

주거권은 단지 누군가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 국가의무의 명확성 / 국제사회의 의무/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 주거권의 재판가능성을 향하여
-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적절한 주거의 권리), 7(강제철거)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릴레이철야단식 18일째

오늘의 단식자 : 송성은 외 3명 (민주노동당)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민주노총 측에 전달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형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가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 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신체검사는 훈령에 의해 의무적·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 측의 한결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번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린 민주노총 기관지를 거리에서 돌리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길게 계속되고 결국 여성 경찰관이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집에

가야한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조합원들은 속옷 하의만 입은 채로 신체검사에 응했다. 그 후 여성조합원들은 "알몸 신체검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4월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 법정대리인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신체검사를 '알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행형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없는 것인데 경찰은 관행적으로 누구에게나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알몸 신체검사를 부추기는 경찰청 훈령의 폐지로 이어지고 인권사각지대가 폐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안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태섭]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한통계약직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

파업투쟁 330일! 깨질 듯하다가도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투쟁의 불씨. 한통계약직노조가 이어온 이 투쟁의 불씨는 다시 힘차게 피어오를 것인가? 파업투쟁 330일째를 맞은 7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000인 실천단' 발족식이 거행되었다.

1000인 실천단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정파탄, 건강악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통신,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내고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김대중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일하는사람들' 소속 정미정 씨는 "(한통계약직노조의 요구사항은) 감옥행도 불사하는 극한 투쟁을 통해서만 국민에게 알려진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는 한편 당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론확산 작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천단 실무팀은 기금조성, 1인시위 결합, 집회 결합, 선전전 결합, 사이버시위 결합 등 실천단들을 세분화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조성된 기금은 신문광고 등 여론작업에만 사용할 계획이다. 정 씨는 "참가자 중에는 1인시위만 가능한 분도 있고, 모든 실천이 다 가능한 분도 있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편하게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1000인 실천단은 이 달 말까지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 5대 도시의 7개 주요거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오는 9일에는 여의도 전화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오후 4시). 한통계약직노조의 파업투쟁은 작년 말 한국통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계약직 중 7천명이 대량해고 당하면서 촉발됐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9일(금)

제 19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현장 복귀만을 원합니다." 군산개정병원, 동광주병원, 한국통신 계약직 등등,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표적 장기파업 사업장 노동자들 70여명이 여의도 공원에 집결해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각지에서 장기파업 중인 36개 노조들은 '공동실천주간'을 선포하고, 장기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1일까지 계속될 이번 '주간'에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와 홍보활동을 벌여 나간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사업

주 처벌 △노사대화 적극 중재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6일), 노사정위원회 위원회(7일), 정부종합청사(8일) 앞의 집회는 물론 9일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 계획도 세워놓았다.

"파업 며칠 제나가요? 400일까지는 썼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우리 파업이 벌써 끝난 줄 아는 광주사람들도 많아요." 보건의료노조 동광주병원 최영숙 지부장 말이다. 250명상 규모인 동광주병원, 그러나 원무과 직원들은 월 60만원, 간호사들은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생긴 건 작년 5월, 단체교섭에서

노사간은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9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은 오전 10시에 '직장폐쇄' 신고를 내버린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나중에 병원은 이름을 '광주병원'으로 바꾸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지만 '동광주병원 노조'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우리는 동광주병원이 아니다"라는 거였다.

런나이 비정규직 노조의 사연 또한 절절하다. 신병식 부위원장 말에 따르면 런나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애프터서비스 기사들로 전원 계약직 사원들이다. "올해 계약만료가 되는 기사들에게 갑자기 개인 사업자등록과 '무한보증'을 요구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 요구는, 물론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전적' 수법이었고, '무한보증'이란 기사가 고전 제품에 대해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사가 무한 재정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2천만원 유한 보증이었다.

서비스 기사 102명은 올해 6월 18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5일 후엔 조합원 전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단체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빠진 게 '무단 결근'이라는 거였다. 이에 런나이 비정규직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지만 각하 당했다. 런나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장기파업 사업장 노조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회사는 온갖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노위·중노위·노동사무소까지 우리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끼리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공원 한 구석에 침낭 하나, 비닐 한 겹을 덮고 자는 이들이 찬 서리를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이런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장기파업 투쟁단은 11일 송실대에 1일 주점을 연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 앞으로 하달한 공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6일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수노조는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일부 교수들의 '불법적인 교수노조 결성' 기도에 대해 "총·학장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 이에 대해 8일 교수노조(준)은 규탄성명을 발표해 즉각 반발했고, 나아가 교육부에 교수노조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공문은 '교수와 노동자는 다르다'는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 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직무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심지어 "대학교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이 공문은 "정부와 총·학장이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교수노조(준)은 이 공문에 대한 규탄성명을 통해 "일반노동자들과 같이 놓 수 없는 '귀족적인 신분'으로 교수들을 지켜세우며 일반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노동 비하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준)는 또 노조결성문제에 대해서도 "대학교수들 대다수가 교수노조의 결성을 찬성하고 있"지만 "당국과 재단의 탄압과 보복이 두려워 감히 노조가입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육부가 총·학장들을 교육부의 하위관료로 여기고 교수들을 탄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서울대학교 인문관 8동 대형강의실(102호)에서 교수노조 창립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곧바로 3시에는 출범식이 계획되어 있다. 교육부의 방해·탄압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수노조는 예정대로 출범할 전망이다. (범용)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복 전쟁과 한국의 전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항하겠다"며 "58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쟁 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이하 전쟁 반대 공동실천)을 결성해 반전평화를 위한 대규모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군수산업체 밖에 없다"며 "미

군은 지금 민간 거주지역·병원·직업자 건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 등 아프간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미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전쟁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파병 및 전쟁지원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쟁반대 공동실천은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반대 △아프간 난민지원 등 4대 목표를 걸고, 8일 정오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12월 말까지 진행돼 국회 및 행정부와 미국 정부에 전달될 계획이며,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함께 벌인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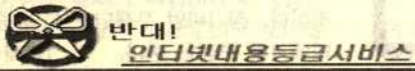
한편 지난 6일 국제아동기금(UNICEF)은 "1,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양의 식량을 아프간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혜정)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 시간 11월 9일 (금) 오후 3시
- 발제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론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 주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회 각 단체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 담당 주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릴레이철야단식 19일째
오늘의 단식자 : 이광열 간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0일(토)

제 19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 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적 1명을 포함한 재일동포 청년 4명을 대상으로 9~12일 4일간 나눔의 집 방문, 장기수와의 만남 등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조선적'이란 일본정부가 45년 패전 후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던 당시 국적란에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조선'이란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말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수교만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의 재일 동포가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60여만 재일 동포 중 15만 정도가 여전히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모른 채 '조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경 영사로부터는 "조선적은 '조총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국적전환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도쿄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던 조선적은 영사관에 입국절차에 관한 문의를

했으나, 영사관 측은 "모르겠다", "담당자가 없다"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에 있는 다른 조선적은 한국입국시 필요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온 신경을 쏟다가 미리 예약한 비행기표가 취소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한국체험 프로그램에 유일하게

참석한 조선적도 애초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으로부터 "조선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조선'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들은 분명히 '무국적자'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이름을 국적란에 표기하느니 차라리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어렵사리 입국할 수 있었던 조선적은 이런 궁금증에 쉽게 답한다. "국적이 나눠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조선적이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그런데 왜 굳이 국적을 바꾸어야 하느냐?" (범용)

<논평> 자유인의 금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우리는 지적 자유가 인간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의견, 특히 통치자의 그것과는 다른 의견을 소지하고 표현하는 그의 권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규정된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박탈되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이상은 1950년 '자유인선언'의 한 구절이다.

오늘은 소위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드는 날이다. '비천'하고 '이기적인' 문제집단으로 노조를 사고하는 이들에겐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월등한 '교수님'들이 '천박한' 노조를 만드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교육관료들의 공격과 탄압의 엄포가 심상치 않은 오늘, 우리는 교수노조의 의미를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연봉제로 언제든 자르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맞서서 공동의 전선, 자유의 목소리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불법'의 울가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수들이 '아니오'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육구조와 사회환경을 원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 총·학장에게 하달한 공문에서 "대학은 지난날 우리나라 현대사를 주도해왔고, '대학 교수는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강한 의지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언급한 바대로 교수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라. 교수노조의 힘찬 출발과 자리매김을 기원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옥외집회 개념 수정

현행 집시법 제2조는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잠실운동장이나 대학 노천강당과 같은 '천장이 없는 폐쇄공간'도 옥외집회에 준한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연석회의의 개정안'(아래 개정안)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옥외집회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다.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집시법 제8조는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특정단체 등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특정장소를 장기간 독점하는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중복집회신고 시 경찰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사자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사전정보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 녹음 또는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은 집회참여자들의 의사표현력

또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집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정보취득 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문화했다.

4. 경찰의 개입 집회방해 방지

현행 집시법도 "경찰이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통보 없이 출입하거나 기자로 위장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장소 및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주취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경찰폭력 발생 시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며, 경찰차량, 병력 등을 이용하여 집회장소를 에워싸거나 경찰이 집회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집시법 5조 폐지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 그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어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집시법이나 기타법률을 통한 사후적인 규제만 하도록 한다.

6. 과도한 신고사항 축소

집시법 6조는 무려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둬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예정인원·행진로 등)으로 신고사항을 축소함으로써, 경찰의 빈번

한 개입과 이로 인한 집회방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7. 대사관 등 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은 집시법 11조를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로 문제(12조)

집시법 12조에 따라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한다. 교통소통도 확보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교통소통만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박탈하는 금지통고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9.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문제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리고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시급한 이유로 48시간 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집회의 경우, 신고서를 집회 개최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3일(화)

제 19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치고씨 재판 새 국면

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치고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 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치고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다.

이날 이씨는 재정신청 취하서의 필적은 "모방된 글씨"라며 재판장에게 윤씨의 필적과 '취하서'에 나타난 '윤치고', '독직폭행' 등 필적과의 차이를 하나 하나 지적해나갔다. 윤씨 필적의 특징은 "필두(筆頭)에는 힘을 주지만 글자 끝에 가서는 가늘어지는 필행"인데 비해 "(위조된) 재정신청 취하서는 시필에서 종필까지 똑 눌러쓴 필행이며 글자의 굵기가 같다"는 것.

이씨는 또한 '취하서'에 나타난 무인이 전사(轉寫)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사람의 원래 무인은 살의 신속성으로 말미암아 인주를 바르고 찍을 때마다 번번이 차이가 나며 윤선(隴線=지문에 나타나는 선)이 가늘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비해 재정신청 '취하서'에 나타난 지문 3개는 △'와상 문형의 상단 거리와 가로 폭이 똑같고', △윤선이 '번지고 퍼져있고', △원자로 마찰한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데다 △'취하서'에 찍힌 3개의 지문에는 모두 좌측 하단부에 7개의 점이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과 달리 원본에 접근할 수 없는 민간감정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사본 감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복사가 선명한 경우 원본 감정과 차이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힘이 드는 사본 감정을 기피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수사 한다고 책상 위의 지문까지 채취하는데 왜 사본 감정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의뢰 받은 민·형사사건 감정만 해도 3천5백여건에 이른다는 이송운 원장은 한 국 문서감정계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

랑하는 원로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원장의 증언을 받아들일 경우 교정계는 물론 검찰도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윤치고씨 '무고'사건이란?

윤치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이던 92년과 93년 자신을 혹독하게 집단구타 한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 하자 윤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다. 그러다 96년 출소 후 그는 가짜 서명·날인이 된 재정신청 취하서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윤씨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전문가 감정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당시 청송감호소 소장 여광석 등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지만 99년에 검찰은 돌연 윤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15일·2001년 10월 5일자 참조> [김보영]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 위원장은 이날로 김대중 정권 들어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된 셈.

단 위원장의 모두진술은 "올해 구속된 노동자가 220명이 넘는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아픔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토로해야하는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전교조 조기 합법화' 등을 약속해놓고 이것을 어긴 정부를 비판한 다음 "대화를 통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언론은 노동계의 고민을 외면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집회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모두진술을 끝낸 단 위원장에게 △2000년 5월말 총파업 △2000년 롯데호텔 파업 △2000년 한통 파업 △2001년 대우차 파업 △2001년 6월 총력 투쟁 과정 등에서 야기된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 [심대섭]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는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아시아 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회의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도·감청 위법과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선언 요지를 소개한다.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의 선언' 요지

1.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듯 하다. 좀더 많은 아시아 민중들이 보편적인 인터넷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책 결정에는 아시아 민중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2.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테러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연이은 미국 등의 보복 공격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류애적·민주적인 사회의 기초인 시민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시작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차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터넷 접근의 차단은 매우 문제가 있으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 이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신태섭]

주간인권호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총·학장 앞으로 '교수 노조를 막아 내라'는 취지의 공문 보내. 교육부는 공문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11.6)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에서 출범식 가져(11.10)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수정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제시(11.9)

4. 장기파업·비정규직 설움을 날려 버려라
한국통신계약직 등 36개 장기파업 노조들 '공동실천주간' 선포,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투쟁 돌입(11.6), 파업투쟁 330일째 맞은 한통계약직노조와 함께 하는 '1천인 실천단' 발족(11.7) 비정규철폐연대(준) 발족(11.7)

5. 전쟁아 멈추어라, 평화의 불씨야 들불이 되어라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 등 돌입(11.8)

6. 김대중 정권 4년= '노동자 수난시대'
민주노총, 11월 6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가 2백23명이라고 밝혀. 10년 만에 노동 관련 구속자 수 최대 기록. 김대중 정권 4년 간의 구속 노동자가 6백68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간 6백32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11.6)

7.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언제까지...
대구여성회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제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이라 판결(11.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4일(수)

제 19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여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 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영등포구청지부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송파구청지부도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치단체 중 용산, 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년을 정함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들을 6급이하 공무원들(57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 영등포의 경우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2세였고, 최악인 송파의 경우는 50세였다. 그나마 파업투쟁을 벌였던 서대문은 지난

6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52세에서 55세로 연장됐고, 지난달에는 관악과 동작이 52세에서 각각 55세, 56세로 연장되어 차별의 정도가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경우처럼 지난 9월 25일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10월 20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예도 있다.

자치노조는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98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라'는 표준안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렸지만, IMF를 전후로 시작된 공무원 인원감축의 한파 속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일 반공무원들과는 달리 각 자치단체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문제가 자치단체장의 결단에 의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결단을 내린 자치단체장은 거의 없다.

자치노조 안치복 위원장은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되고된 사실을 거론하며, "고용직 공무원 정년규정이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금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도 예산상 크게 부담은 없다. 결국 정년 차별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충성심의 발로"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노조는 영등포구청지부, 송파구청지부 외에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99년 9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자치노조는 현재 전국 고용직 공무원 2천5백여명 중 1천2백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치노조가 그동안 고용직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범용)

●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

교육권과 신자유주의 계급재생산의 고착화로 귀결되는가?

· 11월 17일(토) 오후 3시/ 인권운동연구소(4호선 한성대역 7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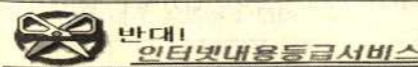
· 초청발제 : 송경원(진보교육연구소)

1. 최근 진행되는 교육구조조정

2. 교육구조조정이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3. '교육권' 방어를 위한 전략

· 문의 :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02-3675-5363) / 참가비 : 2,000원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24일째

오늘의 단식 : 부산정보연대 권병한 대표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고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 22, 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6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을 전면 배제했다. 황 씨가 입소 때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간질 증세를 보였으며 지병(알콜중독)에 의한 사망일뿐이라고 일축해왔던 것이다.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이 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고 황영환 씨와 같은 감방에 있던 박아무개 씨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올해 3월경 경인방송에서 노역형과 교도소 내 의료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이를 본 박 씨는 "황영환 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자 재소자 김아무개 씨가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제보한 것. 당시 황씨는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의 의무를 게을리 해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는 같은 방 수용자들의 요구가 사고 이를 전부터 있었고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결은, 교도관들(또는 경비교도대)에 의한 구타 의혹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는 한 마디를 앞세워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 또한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황씨 사망 후 소내 조사과정에서 재소자들은 황씨가 사고전날 교도관들에게 끌려가 맞았다고 호소하며 다리의 멍 자국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교도소 측의 진술과도 합치한다. 그러나 조사계장은 그들을 억박지르면서 다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재소자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답변을 일관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 황영환 씨 사건은 교도관들의 자체조사 관행이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도소의 심각한 의료문제, 분류수용원칙의 준용, 노역형에 대한 유예제도 및 대안처벌 마련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보영)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은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 1만8천여명은 △쌀 생산비 보장 △WTO(세계무역기구) 쌀개방 반대 △한-미,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대북 쌀지원 확대 △쌀 추가매입본 4백만석에 대한 올 추곡수매가 2등급 기준 조기수매 등을 요구했다.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이종화 정책위원장에겐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이번 농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 15일 쌀 수매 요구 동시다발 투쟁을 벌였지만 정부는 '대권놀이'에만 빠져 450만 농민의 분노를 알아주지 않는다. 쌀값 폭락과 쌀수입 개방 움직임으로 여기저기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쌀 생산비 보장이 중요한 현안 같은데?

"정부의 '작년 수확기 쌀값 수준 보장' 약속은 결국 '공수포'였다. 도매상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아예 수매를 미루고 있는데, 농민들은 연말에 빛 갚아야 하니까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다 판다. 조곡(찹쌀)은 쌀) 40kg 생산원가가 6만원인데, 요즘 그걸 시장에 팔면 4만8천원에서 5만1천원 정도 밖에 못 받는다."

◎ 정부는 쌀값 정책에 왜 미온적인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2004년 쌀시장 완전 개방을 약속했는데 개방되면 헐값인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가격경쟁이 될 리가 없다. 정부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쌀값 폭락을 방치·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 쌀 300만석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의미는?

"논농사 위주인 남측 식량 자급율이 30%, 북은 발농사 위주고 자급율 60% 정도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남의 쌀은 북으로 보내고 북의 쌀작물은 남에서 받아야 한다. '대북지원 300만석'은 현재 남한 내 수급 조절과 통일을 대비한 영농 정책이 맞물린 요구이다."

◎ 정부에 바라는 정책 기조는?

"'쌀값인하, 쌀 생산 감축'만을 기조로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 쌀 이외 작물은 자급률이 옥수수·콩과 같이 10%도 채 안 되는 작물도 있다. 식량수급 전망을 멀리 보고 농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부의 '개방 농정'에 묵묵히 따르라는 것이 농민에게 생존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왔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5일(목)

제 19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 「대테러방지법」 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자장 권두섭 변호사는 "테러의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점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공공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면 이것도 테러로 규정되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의 특례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참고인의 구인·유치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인권침해 조항으로 문제삼았다. 특히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

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테러활동의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테러행위라는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

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10일간만 하기로 공지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20일 이상이다.

국정원의 말대로 된다면 11월 12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인권침해를 부를 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 달도 채 못되는 기간에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셈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범용)

클릭 인권정보자료

'통계로 보는 인권 -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안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 이 자료집은 여기저기 나누어진 상임위 자료를 검토해서, 인권에 관련된 사안을 골라 주요 상임위별·주제별로 분류해 놓았다. 각 상임위별 주요 목적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자료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달척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검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범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수부는 입건 사건 11건 중 2건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8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 중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은 디지털말(www.digitalmal.com) 이대성(29)씨 사건이다.

디지털말 웹마스터인 이씨는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친 이회창'이란 게시물을 복사해 이 씨가 이용하는 다음카페(cafe.daum.net) '항상 웃음이 넘쳐흐를까?'(아래 웃음동)에 올렸다. 이씨가 옮긴 게시물은 "이 총재 부친이 검찰청 서기로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다. 이 총재는 광주사태 이후 애국세력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총재는 부정축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글을 옮긴 이 씨에게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

한편 이번에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모(38)씨는 안티DJ 사이트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이며, 광주사태 배후조종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직접' 올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건으로 인해 지난 10월 19일 검수부에 체포돼 1차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11월 2일 검찰에 출두 요청을 받고 검수부에 출두했다가

같은 날 구속됐다. 디지털말 이준희 기자는 "이씨가 검찰 1차 수사를 받은 뒤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게시판에 오른 글을 단지 카페에 옮긴 것뿐인데, 검찰이 나를 체포해 수사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발표해 "이씨가 옮긴 글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이씨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며 "검찰이 네티즌들의 정보소통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긴 이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이 인터넷 자체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검수부 담당검사 사퇴 △이씨 즉각 석방 △통신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통신망법 61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심태섭)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전자카드화사업 추진단'(아래 추진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담당하게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참여 희망업체(또는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 본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KHC, 신보람, 은행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도입될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라 할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정책부장은 또 "전자건강카드에 현행 기재정보만 기록된다 하더라도 전자화된 정보 기록 방식은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분야에 사기업 컨소시엄전자건강카드사업 도입,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며 점차 사회적영역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6일(금)

제 19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재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 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실사 방하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점거를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정한 입법예고기간은 10일로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 일을 맡고 있는 양영미 간사는 "법을 만드는 이 유도 불분명한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법을 왜 국정원이 주도해서 그럴

게 서둘러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도 "국정원이 이런 문제를 지금 갑자기 제기하는 것은 남북 화해 시대에 할 일이 없어져 가는 국정원이 테러 국면을 발판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뉘앙스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정주연 활동가 역시 "9·11 테러 후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별로 크게 위협하지 않은 정치적 소수 그룹들의 저항 행동도 테러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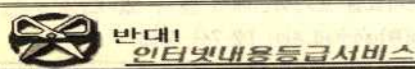
한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용산경찰서 소속 중견 경찰관은 "국정원이 테러의 규정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고, 테러의 징후가 보인다"는 등, 테러와 연결될 것이라는 등, 수사권을 야금야금 넓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러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정원과 달리 경찰 업무는 공개되어 있어서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가 많아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되는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특공대가 첨단 특공대임을 상기시키면서 "경찰의 기존 수사권을 가지고도 테러 문제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국회로 상정된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되는데 국정원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치러 하고 있다.

(범용)

만화 사랑방

이동수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25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안길수 씨 외 4명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범용)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11 테러사건'은 대단한 충격임에 틀림없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권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이런 대응방식은 법치국가를 열망하는 각국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테러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확대되고 장기화될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원인을 분석 없이 '강공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실제로 방지한다고 보는가?

"회의적이다. 그런 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지를 문제삼아야 한다. 사실 국제테러에 대처하겠다는 대부분 대책은 별 소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말하는 대책들(테러자금의 거래금지, 외국인 동향관리 등)은 이미 국정원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이제는 내놓고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담당하게 물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욕테러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중대하고 지속적인 테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국정원은 외국에서도 이 정도 테러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 경우 연방국가이고 경찰권이 각 주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방차원의 테러방지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미국과 독일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게 없어도 테러에 대처하는데 문제없다고 본다."

◎ 군에 일정한 경찰력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군은 원래 민간인에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되거나 조직된 기구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7조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런 법을 9.11 사태에 관습해 일령중탕만 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

◎ 그 밖에 할 말은?

국정원이 월드컵을 핑계로 이런 형태의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때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계적인 공안정국에 편승하여 공안권력을 강화하려는 기도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주기 바란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 테러대책 수립이 아쉽다.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을 헐값으로 '사기업'에 팔겠다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 공공연맹 등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데 연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의 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공동대표 권영길 등)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또 "공공부문은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한 바 있다. 공투본을 결성한 노조가 속한 기업들은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외 사기업에 매각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송유나 정책기획부장은 "지난해 9월 민영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의 경우 외국 자본이 자본의 60% 이상을 갖고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됐으며, 또 한국통신 정부 지분 매각 때 이를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 자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은 또 "외국자본이 공공산업에 침투해서 가져온 결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17일(토)

제 19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존'

정통운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이 폐쇄됐다. (<http://exzone.com>) 이는 정통운이 엑스존에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존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등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엑스존 운영자는 올 8월 정통운에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다. 정통운 결정문에는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 '음란'하다는 것인지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들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작되자 정통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엑스존 사이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반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존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사이트가 정통운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존은 또 "등급제 또는 검

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존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링크돼 있다. (심태섭)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잭팟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장이요, 대테러센터도 국정원 수하에 두게 되어 있다. 국정원은 '테러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면 현재 경찰에게만 허용된 무기의 사용권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군 병력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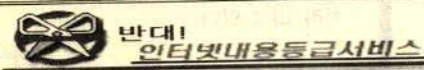
지금도 권력이 넘쳐나 틈만 나면 조직사건을 터트리고 민간인 사찰을 일삼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대테러활동은 현행 법령과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 국정원은 활동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권력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일선 경찰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정원은 '적용의 대상을 최소화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능청을 떠낸다. 나아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이 채 못되는 기간 내에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약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권침해의 복병이 테러방지법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가입죄'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를 연상케 한다.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권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증거능력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인의 구인·유치 조항이나 구속기간의 연장 조항 모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이 자기논리를 개발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나간다. '약법이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에 결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이 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26일째
오늘의 단식 : 민예총 정책기획팀 정은희 간사

<기고>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11월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의 출범이 합의되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9·11 사건 이후 증폭된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 별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심부 국가들은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유일한 대안이라 여기며, 이점을 최소화하여 뉴라운드 출범을 성사시키는 데에 힘을 모은 것이다. 이로써, WTO 회원국은 2002년 1월 1일자로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까지 3년간 4차 각료회의의 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의제와 방향, 방식으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4차 각료회의의 선언문의 서문에는 뉴라운드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라운드의 공식 명칭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정하였다. 시애틀에서의 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하여 남반구 국가들과 전세계의 반세계화 운동진영에 의해 제기된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로 뉴라운드가 세계 민중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언문에서는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민중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의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뉴라운드 출범의 목적이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낸다.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는 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허안까지 확정되게 된다. 농업협정은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EU의 저항으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몇 가지 추상적인 문구를 첨가함으로써 타결이 되었다.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EU의 주장으로 첨가)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 목표로 하여 5차 각료회의까지 양허안을 제시하고 2005년까지 협상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2004년까지 10년간 24%의 관세 인하와 13.3%의 국내보조금 축소를 약속했던 한국은 감축 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나고, 추곡수매 등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비스협상 역시, 현재까지 진행된 1차 협상에 이어, 서비스 개방 요구사항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양허안을 2003년 3월 31까지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 법률,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생활 전반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한편 규범개정과 관련된 협상에서 수산보조금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항목이 들어가, 한국은 정부의 수산보조금을 감축·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미국 등과 앞으로 3년간 협상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수산업계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정부보조금에 상당부분의 생계를 의존해 왔던 영세 어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고삐를 풀어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WTO가 추구하는 가치인 이상, '뉴라운드의 출범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탈출구이며 동시에 남반구 국가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1인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연행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최 간사는 지난 6월 26일 '국정 투명성 확보·책임행동 실현을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종로경찰서 관할 통의파출소로 연행됐다. 뒤늦게 파출소에 도착한 종로서장은 '과잉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1인 시위를 허락하겠다고 답했으나, 최 간사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을 때도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최 간사는 소장에서 '1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찰들이 일고를 감제로 연행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0일(화)

제 19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의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의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이번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이라는 96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중재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제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제도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전적인 강제중재제도에 대해 "쟁의행위의 방법, 파급효과 등을 추상적으로만 판단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필수공의 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중재회부 이후 중재제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필수공의 사업장 노조의 경우 파업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직권중재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사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중재 회부결정이 있고 나면 이후 행해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능하고 불법 쟁의행위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중재제도가 없으면)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 공익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법원이 위헌을 결정하게 된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

가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제도는 과거 지하철 노조나 한국통신 노조에 대해, 올해의 경우 한전기공 노조에 대해 적용됐으며, 병원노조의 경우에는 매년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동계약지노조 등 조정기간 중 중재에 회부되지 않고 조정이 종료되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경우도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범용)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철폐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법률임을 주장하며 그 동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는 "정민주, 이혜정, 이화춘 씨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후 화순경찰서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이하 범민련) 등은 '강씨 연행 규탄 집회'를 열어 "정치범들을 출소 후에도 공공연히 묶어매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하루 속히 강 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심태섭)

“오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긴급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주최: 민변, 민주법연,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 11월 20일(화) 오후 2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층도 5가)
 · 주최: 제 민주·사회단체(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반대!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27일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오늘의 단식 : non-servian.org 붐어 씨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가 그림다. TV보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집안 일 하는 시간 등을 색연필 한 통을 다 꺼내놓고 색칠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차서 뿌듯해 했었다. 사흘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그림자처럼 '나의 시간'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주 자유롭고 즐거운 작업이었다.

불행히도 어른이 된 이후의 형편은, 특히 인권운동을 하면서의 형편은 '계획'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다. 계획된 일들은 항상 뒷전에 밀리고 무리하게 끼어 든 일이 무리한 생활을 재촉시킨다. 계획된 일들이란 소재 발굴에서부터 공을 들이는 일이고,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염두에 두기에 '열 사람의 한 걸음' 위해 호흡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 무리하게 끼어 든 일들은 이런 계획을 난폭하게 핼키고 찢어 놓는다. 도무지 계획표를 다시 그리고 싶지 않을 지경으로 말이다.

계획의 책방꾼은 대개 정부 당국의 기습적이고 비공개적인 행태가 만들어낸다. 불과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보름 남짓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국정원이 돌연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가장 최근의 기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구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식의 당국의 기습발표와 배짱 집행을 관망할 수 없기에 그에 따라 기수를 돌려야 하는 건 고역이다. 하던 일 접고 피켓 만들어 거리로 나서야 하고, 밤새워 시험 공부하듯 분석을 해야하고, 이런 저런 보도문과 성명서를 써내려 가면서 계획표엔 기약 없는 보류의 밑줄이 그어진다. 방향을 알 수 없는 난파선 위에서 항해하고 있는 아찔함을 느낀다.

몇 년 전 이맘 때 외국의 한 인권단체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찌감치 완성한 다음 해 캠페인 기획을 놓고 예산 배정을 위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었다. 이후 9개월 동안 지켜본 그들의 계획표엔 인정사정 없이 끼어드는 예측불허의 일들이라곤 없었다. 그들의 말끔한 건물과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던 나에게 부러움을 갖게 한 요소였다.

'졸속추진, 밀실추진, 날치기통과'에 멍이 드는 게 어디 인권운동가의 계획표 뿐이라. 당국의 행태는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소망을 짓밟는 일상의 테러이다. 나의 시간을 계획할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인정사정 없이 끼어들지 말라. 방향을 알 수 없는 '위험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제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일을 도모하라.

(류은숙은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주5일 근무제 협상, 한국노총도 두손 들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주5일근무 협상 중단... 이남순 위원장 "임금과 노동조건 변화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하겠다"며, "경영계와의 대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11.1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임금하락 없는 주5일 근무제 입법 없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 개최 "작년 수매 가격 기준이라도 조속히 수매하라". 쌀 생산비 보장이 안 돼 농촌 생존권 위협 심각. "정부·정당은 시급히 장기적 농업 대책 수립해야", 한나라당 앞, 장충체육관, 동호대교 등지에서도 시위(11.13)
4. 뉴라운드,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의 14일 폐막, 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 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이 탄생. 중국도 내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돼 세계 무역자유화 가속될 전망. 2005년 안으로 각 나라별로 협정 비준 후, 2006년 1월부터 본격 발효.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불가피(11.14)/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장 부근에서 연일 반세계화 시위(11.17)
5.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제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11.1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1일(수)

제 19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토론자로 나선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테러 발생시 국정원 장에게 권한 집중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 부여 ▲국정원 수사권 확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등이었다.

"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 안 돼"

발제자로 나선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사태 발생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동원 병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테러센터' 업무에 테러사건 수사권이 포함되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군 수사권'을 인

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다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연구소 박래군 상임연구원은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보안법을 그 원형으로 삼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불고지, 허위사실 신고, 구금 기간 연장 등 여러 조문들이 국보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민약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국보법·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게 뻔한데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국정원 권한 집중 불필요

토론자들은 법안이 현행 정부체계 안에는 없는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그 책임자를 국정원장이 맡게 하는데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 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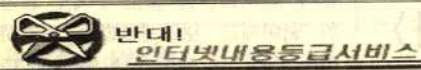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미국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시민권 보호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같이 국가 통제가 심하고 국가 권한이 강력한 나라에서 이런 테러방지법안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 교수는 또 "테러사태 발생시 군 행정과 군 작전권을 이원화되게 규정한 것은 자칫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국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가 법령 검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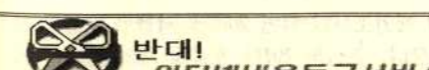
토론자들은 또 테러방지법안은 예고 기간을 10일 간만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입법 시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청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과노현 위원(방송대 교수)이 참석한 것과 관련, 토론회 사회자가 "테러방지법안 문제가 국가인권위에서 다루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민가협 등 사회단체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 '테러방지법안 저지 연합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심대섭]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0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총 이성우 정보화추진단장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1일째
오늘의 단식 : '마테리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회) 최유리

'조선적 제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제일동포 리 씨 사연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선적 제일동포'(아래 조선적) 리00 씨! 이번 방문으로 리 씨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남북분단과 제일동포사회의 분열로 인해 조선적들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선적에게 입국기회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 씨의 한국방문이 세 번째라는 사실은 분명 이례적인 것이다.

이번에 리 씨가 입국하게 된 계기는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이 조선적을 포함한 제일조선인 청년 20명을 서울로 초청하는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리 씨는 이 프로그램의 동경책임자를 자임해 KIN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리 씨의 이번 입국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적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영사관 측으로부터 임시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영사관 측은 보통 조선적들에게 국적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리 씨는 KIN의 초청장을 가지고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과정에서 "국적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작성해야 했고,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온갖 개인정보를 영사관 측에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영사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주소, 졸업 학교 등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런 절차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이번 KIN의 한국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조선적은 리 씨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뿐이었다. 애초 10명이 넘는 조선적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의외로 초라했다. 이에 대해 리 씨는 "많은 조선적

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적들은 한국에 오면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써워 자신들을 잡아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또 리 씨는 대부분 조선적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밖에는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했다. 이는 과거 영사관이나 영사관 업무를 대리했던 '민단'에서 두 번째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적들을 대상으로 보다 본격적인 국적전환 요구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조선적들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리 씨는 설명했다.

리 씨 외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다른 조선적의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 오지 못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까 봐 걱정했다고 전해진다. 리 씨의 아버지는 제주 4·3 항쟁이 진압될 당시 목

포를 거쳐 광주로 피신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는 평소 그토록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했지만, 결국 조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86년경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리 씨는 아버지가 피신했던 발자취를 거꾸로 되짚어 보겠다고 하며, 광주, 목포, 그리고 제주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느껴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싶다고 했다.

60만 제일동포 중 15만에 해당하는 조선적의 대부분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애쓰는 리 씨의 모습은 어쩌면 조선적들이 그토록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들이 '조선'이란 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자신들의 뿌리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리 씨는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남도 북도 조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리 씨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한국을 방문해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했던 조선적이 존재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리 씨 같은 사례들이 쌓여 거대한 흐름을 이룰 때, 조선적에 대한 입국장벽은 비로소 허물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범용)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제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서면으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뷰시 "인도적인 이유에서의 1-2회 방문은 가능하나 국적전환 없다면 이후에는 영원히 한국입국이 불가능하다"라는 등 협박에 가깝게 발언한 사실을 고발했다.

끝으로 KIN은 "정부가 이제라도 조선적에 대해 관리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일본 현지 영사관에 대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공식적·비공식적 한국국적으로의 전환요구를 담당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KIN은 지난 9~12일 제일조선인 청년 20명을 서울로 초청해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으나, 조선적 2명을 포함해 제일조선인 5명만 입국한 바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2일(목)

제 19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고 수정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 기간 내 법안 바꿔치기는 국정원이 무척 서두르고 있으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보여진다.

테러방지법의 새 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장악 의도를 꼭꼭 숨기는데 중점을 둔 흔적이 역력하다. 기존 법안에는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의 수사를 맡는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새 안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새 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에 띄었던 대테러센터의 "테러사건의 수사"를 빼면서 새 안에서는 수사권을 이곳저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편성하겠다고 한 것이 새 안에서는 10개 부처로 늘리면서 검찰이 새로 들어갔다.

이 또한 대테러센터의 사실상의 수사활동과 관련했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정원 관계자도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라 밝혀 국정원이 테러사건수사에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이 여전한함을 드러냈다.

새 안은 인권·사회단체의 비판을 일면 수용하였고, 문맥도 다듬었다.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이 사라졌고, '불고지죄'조항은 '테러범죄신고불이행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테러의 개념과 테러단체 규정은 여전한하며, 외국인 동향 관리 조항 및 난민 지위를 전연 고

려치 않은 테러범인의 인도 조항, 감청 확대 등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하다. 결국 국정원의 수사권 장악 의도를 가리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손질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랴부랴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장이며,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테러대책을 발판으로 막강 권력을 부활시키려는 야욕을 버리라는 인권·사회단체의 지적에 국정원은 요지부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2일 차관회의에서 검토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느티나무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심태섭]

클릭 인권정보자료

A Guide to Human Rights :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

저자: Janusz Symonides 등 펴낸 곳 : UNESCO/ 559쪽/ 2001년

올해는 '국제인권장전'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채택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와 각종 인권조약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절차를 폭넓게 소개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광범위한 인권보장 활동의 외양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5백여 개가 넘는 항목별 해설을 보고 있노라면, '인권사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앞으로 국가·지역 차원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개념 정립과 국제 인권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직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에 연락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최은아 02-741-5363 angelica-choi@hanmail.net)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2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

<현장그리기>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제8차 이동권 집회 ‘저상버스’ 시승기

2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 연대)가 열어온 것으로 이날 8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어느 때와는 달리 ‘장애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시승식’이 있었다. 저상버스는 버스의 바닥을 대폭 낮춰 장애인이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 버스를 탔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라며 신기해했다. 저상버스가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남대문과 광화문을 도는 동안, 장애인들 사이에선 “너무 기분이 좋아요!”라는 환호성이 연신 터져 나왔다.

저상버스에 오르자마자, 어디선가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하는 탄성이 들려왔다. 한 장애 여성이 이제 막 버스에 올랐다.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했고, ‘땀이 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다른 장애인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버스를 탔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라며 신기해했다. 저상버스가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남대문과 광화문을 도는 동안, 장애인들 사이에선 “너무 기분이 좋아요!”라는 환호성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이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상버스 시승에 앞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일반버스를 이용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박 공동대표는 삼 사명의 도움을 받아 필사적으로 일반버스에 승차했던 것. 그 광경은 흡사 전쟁을 방불케 했는데, 이는 하차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시 삼 사명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보통 장애인들이 내리는 뒷문으로는 내릴 수 없었다. 버스 뒷문 중앙에 손잡이 용도의 플라스틱 파이프가 세로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버스 안에서 박 공동대표는 “내가 20년 전 장애인이 된 이래로, 올해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시위를 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버스를 타보지 못했다”고 씩씩해했다. 문득 그가 내린 버스의 앞문 부근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 가족처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노약자·어린이 보호차량, 도시형 버스’
이 스티커의 문구처럼, 장애인들은 과연 편안히 모시려는 가족의 성원에 포함되어 있을까? 노약자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형 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거나 했을까?

오늘도 이동권연대는 서울시가 시혜적으로 도입하려는 ‘장애인용 무료셔틀버스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일반버스 노선에 전면 도입하라는 것이 이동권연대의 주장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내 가족처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에 장애인도 감흥을 갖게 될 것이다. (법음)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감제적인 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보장해야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감제적으로 수집해놓은 지문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십지지문원지’(17세가 되는 해에 등사무소 등에서 찍은 공문서) 반환을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감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보관 중인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번 청구는 지문원지 반환도 목적이지만 이후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투쟁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회견을 마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www.idlaw.net>)에는 서울영상집단, 다음 카페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위헌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첼 동호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심태섭)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 (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체포돼 전남 화순경찰서에 구금되었는 동안 강씨가 재학 중인 전남 의대 학장과 학생처장 등은 광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석방 후 강씨는 “이후로도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에 대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3일(금)

제 19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현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지 게시판에 실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는 22일 인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인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내용·배달 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본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전면적 삭제”를 요구했다. 유씨는 또 인권단체연대회의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문서

끝자락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이 크게 찍혀 있다.

문제의 게시물은 10월 31일 인권단체연대회의(<http://baroseuja.jinbo.net>)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공권’이란 이름으로 올린 ‘인권위원 유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유현 씨가 광주고등법원(1993년경) 및 서울고등법원(1995년경)에서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판결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후, “유현 전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덕과 양심에 추

호도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유현 전 판사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은 전국공공경력피해자연맹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www.ye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2001.7.1 시행)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하이텔 일반게시판에 한 개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올라온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해당자가 수 차례 삭제요구했음에도 하이텔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하이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유현 씨가 문제삼은 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변호사는 “공직자인 경우 일반인 보다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 글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첫 대외 활동이 교착 게시판에 오른 자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는 일이나”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경력을 근거로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뉘먹기가 낡은 ‘업보’”라고 비판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의 ‘불협화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불거진 이 ‘힘겨루기’의 향방이 주목된다. (심태섭)



이동수

장애인의 차별, 제천시 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장애'를 사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승진기회를 박탈당했던 한 장애인이 인사권자인 제천시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제천시 보건소장 직무과장 이OO 씨. 사건의 발단은 7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천시 보건소 홍XX 소장이 사망함에 따라 제천시는 차기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했다. 이때 제천시 보건소 내에서 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씨가 유일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장의 자리는 당연히 이 씨의 몫이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권희필 제천시장은 차기 보건소장의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그 기간에 충청북도와의 인사 교류에 따라 새로 부임한 노△△ 씨를 10월 23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권 시장의 편견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지난 9월 21일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권 시장은 이 씨에 대해 "몸도 불편하고 장애도 대단"하기 때문에 "15만 시민의 의료복지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냐"는 "소신"을 밝힌 것. 권 시장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동정해 드릴 수 있는데," 보건소장의 인사 문제는 "하나의 장애자가 아니라 15만 시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 14일 제천시에 시작서를 제출하고,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권 시장이 "제천시민을 불모로 삼아서 이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며, "장애인 공무원은 물론 제천시민 전체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구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이 씨가 8월초부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 시험에 응시준비를 하다가 합격한 후 "그 쪽의 임용 일자에 맞추어 시작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제천시장이 공평한 인사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차별의 모델"이라고 평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단은 22일 제천시를 방문해 △이 씨의 재발령을 통한 명예회복 △제천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시한을 11월말까지로 못박았다. 이어, 이를 수락치 않을 경우 "전국 장애인들의 분노와 항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제천시장이 제천시민에 사과하고 공직생활에서 물러나야 하며, 나아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포기해야 할 것

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들의 인권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의 아내가 제천시 홈페이지에 남긴 글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저희는 보건소장 자리를 오매불방 탐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여년 동안 산 이곳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범용)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되거나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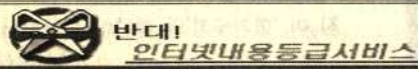
한편,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가진다. (범용)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김대중 정부 4년차 인권관련 지표 및 통계가 「2001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 풍부하게 실렸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info)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나 주제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02-741-5363/ 담당: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 법제사법위원회	총471쪽	24,550원	
• 행정자치위원회	총357쪽	18,850원	
• 외교통상위원회	총299쪽	15,950원	
• 노동환경위원회	총204쪽	11,200원	
• 보건복지위원회	총107쪽	6,350원	
• 문화관광위원회	총 37쪽	2,850원	
• 건설교통위원회	총 41쪽	3,050원	
• 교육위원회	총104쪽	6,200원	
• 국방위원회	총101쪽	6,050원	
			총액 95,050원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3일째
오늘의 단식 : 성남청년정보센터 1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4일(토)

제 19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읍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발부했고, 결국 벌금을 못 낸 구씨는 노역형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씨는 수감된 다음날인 18일 오후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울산 동강병원에 옮겨져 19일 오전 3시경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사람이 단 이틀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온 몸에 멍이 있고 피하출혈이 만연한데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사연을 전해들은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아래 인권연대)는 21일 현지를 방문해 경찰과 교도소 등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경찰 증언에 의하면 "구씨는 연행 당시 술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특이한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도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인권이야기'는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이계수(울산대 교수), 정희진(새움터 운영위원)씨가 맡습니다.

러나 구치소 측은 "구씨가 구치소에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위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행령, 인권활동가 특별임용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인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관료들은 결국 '국가인권위라는 조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위에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 그 자체'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들이 모두 행정관료의 저항에 부딪쳐 답답하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행정부처들과의 타협을 택하지 않고 이런 '파행'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웬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기보다도 자기 능력만 믿고 외롭게 싸우는 '독불장군'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권위원회가 출범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고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이와 같은 고난은 지속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즉 인권위원회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런 고난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언제나 '인권'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건대 지금 인권위원회는 고립돼 있다. 이 고립의 일차적 원인이 현 인권위원회의 엘리트주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인권단체들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 본다. 김창국 위원장은 이 민간단체들의 정기적 간담회 요청마저 거부했다. 인권운동가들을 위원회에 '자리'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하는 김 위원장의 저급한 인식은 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장 사고를 바꾸라고 인권위원회에 대해 주장하고 싶다. '올바른 인권위원회'는 엘리트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고소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재 씨 등 5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노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업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인) 파업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부당하게 제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 노조 요구가 사측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성재 위원장, 하효열 부위원장, 이기일 사무국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조희광, 김종오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려 할 때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노동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기장 문제는 내국인 조종사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6월 대한항공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심대섭)

(☞ 1면에서 이어짐)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동료들이 최소한 4~5차례 이상 옷을 갈아 입혔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은 또 "옷을 갈아 입을 때 보니 구씨 몸 군데군데에 멍이 들고, 크고 작은 흉터도 여러 곳 있었다"고 증언했다. 덧붙여 오 사무국장은 "구씨를 부검한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정확한 부검소견은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일단 구타로 의심할만한 외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하지에 상당한 피하출혈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권연대는 "구씨가 구타 또는 구치소 측의 치료 방치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오는 26일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심대섭)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불과 며칠 동안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즉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구성 △각종 불확정 개념 사용 △몇몇 형량가중 벌칙조항 △전반적 인권침해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회장은 특히 "군 병력 동원은 비상계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없이 계엄효과를 나타낸다"고 우려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추구하고, 오는 27일 정오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법 제정 53년 폐지 촉구 집회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테러방지법이 가결되지 못했다. (범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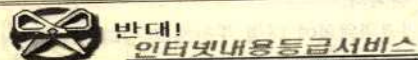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대단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10월 재구속 수감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 문위원장은 지난 99년 7월 구속된 후 구속취소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금속연맹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집시법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는 것은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심대섭)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4일째
오늘의 단식 : 연세대 이반공동체 '킴투게더' 이미라 씨 외 1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7일(화)

제 19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업무를 개시하면서 김창국 위원장이 밝힌 가슴벅찬 소감이었다. 26일 인권위는 광화문 문화관광부 뒤편 이마빌딩 501호의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간이 칸막이를 세워 임시상담실 4곳을 만들고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날 많은 진정인들이 업무개시 이전부터 몰려들어, 한시라도 빨리 자신들의 사연을 접수시키려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동안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어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진정된 사건 중에는 인권하루소식에서 다뤘던 사건들도 많이 접수되어 소외받은 계급·계층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장애 이유로 승진차별

- 구제대상 명백하나 실효성 의문

이날 진정접수 제1호는 재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11월 23일자> 재천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희원 씨의 대리인으로 온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아침 6시 30분경 도착해 세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스승

다면, 현행 법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호와의증인, 교도소 종교활동 금지 - 차별행위이지만 구제대상 안돼

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인공,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행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증인 군 함명 수행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수행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국가인권위의 출범에 대해 지금까지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업무가 시작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구책을 맞추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양 씨의 진정이 인권위의 조상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는 차별행위 대상을 △고용과 관련된 차별 △재화·용역·교통수단·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 2면으로 이어짐)

“오늘 정오, 국정원 앞”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집회

주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 11시 30분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성남방향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에 모여 함께 갑니다.

(→ 1면 '국가인권위' 기사에서 이어짐)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 여론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 개정권고, 현재에 의견표명 가능

다음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혜성 목사는 무려 3건을 한꺼번에 진정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목사는 독일인 요르그 바루트 등과 함께 크레파스나 물감화사에 '살색'이라는 표시를 복숭아색 혹은 살구색 등으로 바꾸길 요구했다. 살색이라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과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여, 피부색이 검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정책권고 정도로 보여진다.

이어 김 목사는 소리랑카인 람짓 꾸마라 등과 함께 기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진정했다. 이들은 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 피해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목사는 또 조연섭 씨 등과 함께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99년 7월 14일자>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출국한 조선족, 고려인, 조선적 동포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대상은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실지조사 가능하나 조사인력 없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벌금미납으로 울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이틀만에 사망한 구승우 씨 사건을 진정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11월 24일자> 오 사무국장은 사망사건 특성상 사체가 보존되어 있을 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즉시 현지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울산구치소 노역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만약 이때 당사자나 관계인이 인권위원의 실지조사를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직제 및 규모에 이견차가 커 아직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질적으로 조사인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사무처준비단 정영선 씨는 "사무처가 구성될 때까지 조사작업 등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전환자 대중교통 이용 차별

- 구제대상이지만 각하될 수도

이날 진정 중 성전환자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성전환자 김XX 씨가 작년 7월 신분증의 사진, 실제외모가 주민등록번호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고문행위

- 공소시효 지나 각하 예상

민주노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방문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행한 자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 줄 것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권고 △노동문제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만 여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60개국 7백25명의 노동단체 인사를 포함해 총 7만8천2백38명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과정의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접수 첫날 방문접수와 전화접수를 포함해 총 1백22건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사무처준비단 최영에 단장은 "지금까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치고는 인권위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했다. 하지만 접수된 사건들 중 상당수는 현행 법 아래에서 또는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더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은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제외하고 조사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제출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해, 인권위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범용>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것이 내 끝이에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외로 배낭여행 가는 것?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조금의 휴식?

지난주에 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여성들만의 자리가 항상 그랬지만 그 회의는 매매춘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모이는지라 상담 얘기, 활동 얘기 등으로 의례 시작 시간을 훌쩍 넘겨 회의가 진행되기 일수였다. 그날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레방 원장님께서 최근 상담했던 얘기를 해주시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얼마 전 한 여성을 상담했는데 상담 도중에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너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한참을 망설인 후에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있기 얼마 전 나는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 1명과 같이 경기도지역 매매춘 실태조사 작업을 도와주러 새우터로 갔다. 늦은 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실태조사를 함께 하러 온 다른 친구들과 6명에서 차 1대에 끼어 타고 전곡과 연천 기차역 주변의 유흥업소 주변을 돌며 조사를 했다. 벌써 몇 달째 조사를 담당해온 새우터 활동가의 말로는 연천과 전곡 지역은 그래도 유흥업소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들, 특히 큰 군부대나 미군부대가 있는 동네는 밤이면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아가씨 황시 대기', '여기서 자자' 등의 커다란 간판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간판들 바로 위층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간판도 보였다.

누구나 꿈이 있을 것이다. 작년 군산에서 포주들과 이들을 묵이해 준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감금되어 고통받은 여성들 역시 꿈이 있었다. 혼자 목욕탕 가는 꿈, 한가로운 낮에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싶은 꿈, 훗날 날고 싶은 꿈... 잠시 돌아보았지만 연천과 전곡의 그 많은 술집들에서 술을 따르고 아버지뻘 되는 남자들의 변태짓을 상대해주는 많은 여성들도 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녀들의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녀들의 꿈은 해외 배낭여행이 아니라 그저 목욕탕 카운터를 상상하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듣지 않고 혹은 들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하고픈 포주들과 하룻밤 여성들을 사교한 남성들의 꿈은? 대한민국 현실에선?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것도 아주 쉽게 실현되는...

(최정민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 (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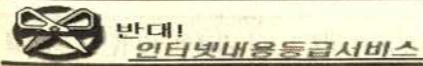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본질 여전 (11.26) /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11. 20) / 민가협 등 68개 인권사회단체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성. 국가인권위원장·국회의원·청와대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 가져 (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행사부와 경찰청에 '집지문원지' 반환 청구.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하겠다." (11.21)

5.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서 장애인 혼자 힘으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승회 가져. 장애인이동권연대 시혜성 무료셔틀버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전면 도입" 요구 (11.21)

6. "너, 조심해" 보안관찰법의 횡포는 계속된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 (39),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연행.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석방 (11.20)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7일째
오늘의 단식 : 평화인권연대 반세계화탑 레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8일(수)

제 19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그동안 국정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옆에 놓고 베껴 쓴 듯하다"며, "국정원이 물러설 때까지 힘을 합쳐 싸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정책기획부장은 "과거 국정원은 누가 정권에 대해 한마디하면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누구나 다 테러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테러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는 국정원의 작태에 맞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과보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불과 10일만에 입법예고를 끝내고 하루만에 차관회의와 당정협의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계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

는 본질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면서, 읍지에서 권력을 꿈꾸는 국정원의 야욕을 고발했다.

이 날 '공동투쟁'은 민의련 박근혜 사무처장이 낭독한 '국정원장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라고 묻고, 그런 국정원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가 끝난 후, 민가협 임기란 의

장 등 대표단은 국정원 청사에 들어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오히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려 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이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한 차례 수정됐으며, 그 후 22일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수정됐다.

한편, 이 법안은 26일 차관회의와 당정협의 및 27일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의 국회상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 이에 따라 '공동투쟁'은 2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테러방지법 결사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범용)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언제 국회까지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9일 이후에는 1인 시위 담당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담당하실 단체는 02-741-5363으로 연락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 앞'입니다.

또한 30일에는 아프간 파병 건이 국회에서 비준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쟁반대·평화실현'에서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소속 단체들이 '전쟁반대·평화실현'에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30일(금) 오전 10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 "아프간 전쟁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주제로 집회를 가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1996년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에바다농아원에서 '더 이상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다'며 일단의 농아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재단 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시설 문제가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용환 등)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에바다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 8월 7일 이사회에서 연대회의가 추천한 민주적 인사들이 과반수를 차지 했"으나 "구 비리재단 측 사람들이 농아원들을 동원해 폭력을 일삼는 등 정상화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에바다 학교 교장실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된 사건은 구 비리재단 측 인사들이 농아원생들을 동원해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은 지난 5월 현 김지원 교장의 취임 때와 같이 구 비리 재단 측에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농아원생들은 연대회의 측 유기준 대표이사가 운영중인 '안세치과' 앞에서 구 재단 측의 동원에 이끌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사퇴진'을 위한 시위를 15일 동안 갖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현 상황을 민주적인 이사로 구성된 현 이사회를 거부하려는 최씨 일가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판단했다. 현재 농아원생들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매일 집회를 갖고 현 이사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구 비리 재단 측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사실상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을 거부한 채 구 재단 측 인사들은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회의 분열을 노리고 있고, 현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대표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농아원을 운영한다"면서 "구 재단 인사인 행정실장이 교장을 무시하면서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결국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최씨 일가의 전횡은 현장 운영권 장악을 무기로 활용해 계속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유지되는 관청과의 유착은 이런 최씨 일가의 전횡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에바다 연대회의는 ▲구 재단 인사 퇴진 ▲현 신임이사진 지지 ▲폭력사태에 대한 적극적 수사 촉구 ▲평택 시청·교육청에 대한 에바다 학원 정상화 촉구 의지를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는 12월 1일 '에바다 5주년 투쟁 기념 집회'를 평택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심태섭)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수은주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 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 나온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동성애자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형사 처벌 협박은 음란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억지"라면서 "근거 없는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엑스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정통부·정통윤에 대해 '공개질의서 발송·단식농성·항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통부·정통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 대표 단식농성장 주변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60일 동안 진행된다. (심태섭)

[광고]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CAR) 자료

WCAR 1~3차 준비회의 문서, 정무간 기구(유네스코, ILO 등), 정부대표발언문(유럽연합, 이스라엘, 교황청 등), '한국 NGO 참가단 자료집'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활동가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전화 : 02-741-5363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8일째

오늘의 단식 : '지 경' 행위예술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29일(목)

제 19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28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 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 28일 현재 68개 인권·사회단체 가입)의 활동도 다각 화되고 있어, 향후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공동투쟁 소속 남녀활동가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의원들은 테러 방지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테러방지 법의 목적은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 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고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된 결의를 밝 혔다. 1인시위는 테러방지법이 저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투쟁은 또 인권운동사랑방 서준 식 상임활동가의 대표서명으로 '테러 방지법(안) 입법반대에 관한 청원서' 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 에 소개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 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케 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몇몇 의원들 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

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 민주 당 이낙연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명했 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일부 의원들로 부터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 화로 확인했다. 지난 26일 테러방지법 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협의가 이 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 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찬성하거나 묵인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전북지역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정원 전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저지활동을 개시하기로 해, 그동안 서 울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져온 법안저지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정원 전북지청을 함의방문하고, 이후에는 전라북도 국 회의원 전원에게 법안에 대한 반대의 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테러방지법은 공동투쟁의 '청원서'와 함께 29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 의가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소위, 상임위,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다. 테 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상임위, 본회의 중 한 곳에서 만이라 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면 된 다. (범용)

<자료읽기>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2001년, 274쪽) 아픈 사람에게서 국경이 없다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 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부는 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실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묶은 37개 현장보고서다. 1kg으로 태어난 미숙아, 만성신부전증에 걸린 미 안마의 민주투사, 폐결핵으로 사망한 파키스탄인 등. 이들 중 일부 이주노 동자는 지금껏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부는 이주노동자의 의료실태와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필자는 특 히 최근에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국내에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료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 유입초기의 의료수요가 응급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다 면 지금은 만성질환, 암, 출산과 육아, 산업재해 등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의료공제회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의 료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민간 의료공급 또한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의료보호의 질적 증가는 더 이상 민간의 무료진료나 자원봉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 하고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서 이들의 의료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아픈 사람에게서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은아)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농민과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시행 하려는 노동·농업 정책에 반발해 공 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 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서 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8일부 터 오는 12월 1일까지 '쌀값 보장·주 5일 근무 도입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 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오전 전농과 민주노총은 "그동 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WTO 쌀 수 입 저지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해 투쟁해 왔으나 "정부와 정 치권이 아무런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 지 않고 있"다며 공동농성에 들어가게 된 절박한 사정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동농성 돌입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전농은 "(지난 13일) 참다못한 2만여 농민들의 상경투쟁에 도 불구하고(당국이) '작년 쌀값 수 준으로 수매가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26일부 터 쌀 4백만석 추가매입분에 대해서조 차 폭락해 있는 시가로 매입하고 있 다"며 정부의 쌀 포기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또 WTO 뉴라운드 출범은 "이 땅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 다"면서 "12월 2일 2차 전국농민대회 를 통해 4백50만 농민의 울분을 강력 히 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농은 지난 13일 1차 전국농민대회와 관련 정 의장 등 지도부 9인과 지역농민회 간부 9명에 대한 경찰 소환장이 발부 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노 동시간 단축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 다고 주장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 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김 대중 정권이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 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이재철 조직차장은 이번 노상 공동농성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

한 주5일 근무제, 농민에 대한 쌀값 보장 등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내놓지만 실제적 문제해결은 하 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농성을 계기로 노동자·농민들의 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해 노농 문제를 풀어야 할 것" 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전농과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를 통 해 농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여러 사 회단체들과 연대해 촉구하기로 해 여 러 사회단체들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대섭)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정도 무 시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결국 타워 크레인을 무너뜨리는 참사를 낳아, 전 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채수 봉, 아래 타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 방학동 마그넷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 인이 설치된 후 텔레스코핑(고도조정) 작업 중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고 5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두 가지 작업을 필요로 한다. 먼 저 철구조물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을 세워야 하고, 이어 작업고도에 크레인 의 위치를 맞춰놓는 텔레스코핑 작업 을 해야 한다. 텔레스코핑은 타워크레 인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손 꼽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날씨가 청 명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해 숙련공이 작업을 하고 있다.

타워노조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하 청업체인 흥화타워(회장 유관호)가 "타워크레인 설치 후 산업안전관리공 단에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 으로 텔레스코핑 작업을 유도"하다 사 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 인 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타워크레인 을 설치하고 텔레스코핑 작업까지 마

친 후 완성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따 라서 타워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된 대형사고"라고 평했다.

이에 앞서 흥화타워는 지난 5월 경 기도 상동 대우자판의 한 아파트 현장 에서 과부하방지장치를 제거한 채 타 워크레인 작업을 하다 타워노조의 고 발로 작업중지를 당하기도 했다. 과부 하방지장치란 일정 중량 이상의 물건 을 들어올릴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마저 작업 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는 타 워크레인 관련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대형참사는 선진국에서는 거 의 없는 일"인데 "원인이야 어떻게 됐 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만 공식적으로 타워크레인 2대가 넘어졌다"며, 산업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을 정부에 촉구했다. (범용)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39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김혜련 전국집행위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1월 30일(금)

제 19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집을 수박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써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

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했던 "대부분의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 등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며 재외동포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재외동포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9년 당시 단식투쟁까지 하며 '동포 차별법'에 반대했던 김해성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접한 후, "어쨌든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배덕호 사무국장은 "그동안 이 법으로 인해 불이익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해외동포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급히 구성하고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 이종훈 연구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법안이 만들어져 일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꿔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99년 당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법음)

◆ 편집자주=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아래 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다른 외국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기간연장 및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토지보유,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까지 적용 받는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에 도착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당시 부평경찰서는 대우공투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단결', '투쟁' 등의 글자가 적힌 의류를 착용하고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2월 22일 당일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부평역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은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식당에서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들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 요구를 묵살한 채 오후 6시경까지 이들을 구금에 놓았다. 강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2일에 불법 폭력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원고들이 그러한 시위에 참가할 의의가 들어 원고들을 연행한 것이므로 이는 범죄예방조치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을 연행할 당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경찰서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이 정한 제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대우차 투쟁 과정에서 집회장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한편 금속연맹 부산·양산본부 등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은 이 집회 또는 이 밖의 대우공투본 집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여건 낸 바 있고, 대우차 노조원들도 지난 4월 11일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아직 진행 중이다. [심태섭]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경인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98년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김건수(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과 지난해 매항리 폭격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

김 씨는 경희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있던 있던 96년에도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98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즉 김씨는 이번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건수 석방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김씨에게 또 다시 국보법 울가미를 씌우는 것은 잔혹한 처사"라며 "김씨와 상의해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 씨 경우, 검찰은 "이미 배씨가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두지 않기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한 바 있다. [심태섭]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상정한 반민주·반인권적 '테러방지법'(안)도 곧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긴급 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① 아프간 파병안 반대 1인 시위
30일 오전 9-10시 국회 정문 앞
시위자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

②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반대 긴급집회
30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0일째
오늘의 단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송영완 조사통계부장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제1989호-제200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일(토)

제 19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끝내려 했던 인류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아프간 침략전쟁을 규탄했다. 이어 “이에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의료지원단·수송지원단 5백명 내외이며, 파견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올해 147억6천만원, 내년 440억1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

법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지난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테러방지법은 다음주 중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범용)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동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태섭)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흑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은 국보법이 안고 있는 반인권성을 ‘운영의 문제’로 호도해왔다.

더구나 올해는 한 술 더 떠 국보법의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에 통과한 그 기만함은 각종 민생법안의 정체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법안이 수정된 것을 보면 국정원이 어지간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고쳐 위장하려 해도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에 근거한 공안권력의 부활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에 머물게 하라.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의 쌍두마차를 국정원이 운전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에 먹구름이 될 뿐이다.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1일째

오늘의 단식 : 월간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 조성용 씨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사회단체가 집중 비판한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국정원의 수사권을 내포한 것으로 드러나(11.21)/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11.22)/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11.23)/청와대에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전달(11.24)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11.26)/국정원 앞 항의시위, 국무회의 의결(11.27)/김홍신 의원 청원소개로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11.28)/국회 정보위 회부(11.29)

2. 국가인권위 '날개'없는 출범, 국민 진정 '붓물'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 접수.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어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어 대거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 인터넷 바다에 검열의 그물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11.1)/내용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존(http://exzone.com)' 폐쇄,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은 정통윤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해 폐쇄(11.9)/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요구 1인 릴레이철야단식 40일째 명동성당에서 이어져(11.30)

4. 생존권 수난, 더욱 차가운 겨울

한국통신 비정규직 국회본회의장에서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 기습시위 후 전원 구속(11.2)/삼성SDI해고자 송수근 씨,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구속(11.2)/울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2백23명으로 10년만에 최대수치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 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사업장 36개 노조 여의도 공원에 모여 노숙투쟁(11.6~11)/"쌀 생산비 보장하라" 절규속 전국농민대회 열려(11.13)/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 뉴라운드 시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등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11.14)/민주노총과 진농,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상 농성 돌입(11.28)

5. 평화는 어디에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활동 시작(11.8)/그러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논평

-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11.3)
- 자유인의 금지 위에선 대학을 창조하라(11.10)
- 국정원은 대국민 테러를 중단하라(11.17)
-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11.24)

인권이야기

- 낮선 길을 찾아 가보기(11.6/신윤동욱)
-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11.20/류은숙)
-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것이 내 꿈이예요(11.27/최정민)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11.8)
-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자료집(11.15)
- A Guide to Human Rights(11.22)
-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11.29)

중요판결

-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던 직권중재제도, 법원이 위헌제정 결정(11.20)
-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11.24)
- 헌법재판소, 제외동포법 헌법불일치(11.30)
-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침해(11.3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 거리 농성을 시작한 이가 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를 전면 개정하라”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 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최씨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생계를 위해 꾸려왔던 청계천 좌판을 접어야 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홀로 살아가는 최씨의 노점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삼아 “최저생계를 포기하던지 노점을 포기하던지 하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좌판을 접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한 달에 약 26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 받는 최씨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만 매달 29만원을 지출한다. 추가로 장애인 수

당을 매달 4만5천원씩 받긴 하지만 저자 가계부를 흑자로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아파트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정부는 주거급여비로 쪽방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월2만3천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최씨가 택한 방법이 바로 명동성당 거리농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생활비를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올해에 비해 3만원 오른 99만원으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임태근 사무국장은 “최저생활비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정 기준이 까다로와 최저생계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한편, 농성단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추정소득·부양비 간주제 폐지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에 시급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농성단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한국빈곤상담연구소 활동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8일까지 매일 시민들을 상대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옥란 씨 등 농성단은 4일 서울 강북구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실을 방문해 “2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 보라”는 뜻으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생계급여를 반납할 계획이다. (심태섭)

2001년 12월 4일(화)

제 19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검찰이 막판 교섭에 한창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예는 드물다”며 “이번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두요구를 교섭기간 이후로 연기한 경찰의 방첩과도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일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던 공단 측은 잠시 정화한 사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노조는 당시 공단 측에서 ‘이사장이 춘천에 약속이 있어 나갔다’며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전우일 선전국장은 “공단 측에서 일부러 협상을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이 “사회보험노조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와 연대할 것을 우려”해 사회보험노조를 먼저 ‘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업무의 일원화 △연한승진제(승진직제해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범용)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다.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의무장관의 최근 발언내용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읽고 기가 찼다. 도대체 누가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란 말인가.

미국,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등지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은 실제도 없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군대가 나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에서도 들었다. 지난 11월 6일 정부는 이른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두 번의 내용 수정 끝에 12월 4일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가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국정원)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인권운동세력이 책임질 건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철없는 반대만 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무책임하고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자. 시간이 없다지만 '서두르면 일 망친다.'는 말도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다.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은 정부가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사실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국가는 그 권한의 확대에 앞서 그 권한확대(-자유축소)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시민인권운동가들은 무책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분배원리에 따른 국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계수는 울산대 법학부 교수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1. 속지말자, 국정원! 제지하자,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차관회의 및 당정협의 통과 (11.26) ->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11.27) -> 국회제출, 정보위원회 (11.28) / 68개 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제지' 집회 (11.27) ->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 (11.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및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 (11.30)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거쳐 입장표명 하겠다" 국회에 의견전달 (11.30)

2. 국가보안법 53년, 아직도 그대로야!

수원지법, 결혼식 1주일 앞두고 연행된 김진수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4월 실행 선고 (11.26) / 국보연대 등,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주간 선포...국회 앞 1인시위 돌입 (11.29) / 반국가단체 재일 한동련 명예회복 심포지움, 재일동포·일본인 10만명 서명서 청와대 전달 (11.29) / 국가보안법 53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12.1)

3. 법률(안) 계약,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학부모단체들, 사설 유아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 철회 요구 (11.26) / 학부모단체들, 한나라당사 앞 교원 정년연장 철회 집회 (11.28) / 국회 법사위, 교원 정년연장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11.28) / 56개 시민단체, 남북 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계약 반대 (11.28) / 국회 국방위,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 (11.30)

4. 제외동포법, '제외'동포법으로 판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제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 (11.29) /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제외동포법 위헌 선고 (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인가, 조작인가?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리를 이유로 신검 국정원장 사퇴 공방 (11.26) / 서울지법, 수지김 사건 국정원 직원 2명 등 소환조사 (11.26) / 서울지법, 수지김 피살사건 첫 공판... 살해용의자 윤씨 답변 거부 (11.27) / 김현희 KAL기 사건 14주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1.29)

○ 주요판결 및 통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숨진 노숙자 평균 45.5살...노숙인 보호시스템 취약 (11.26) / 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노동자 실질소득 줄고 계층격차는 심화 (11.27) /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합헌 (11.2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5일(수)

제 19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 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권리행사방해행위, 직무유기 등을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지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모씨는 구수용자 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의 허가받지 않은 통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가 제한 없이 서신을 발송할 수 있게 한다면, 마약이나 탈주, 제법의 우려가 많아 검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신에 대한 검열은(중략) 부득이 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 비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제한'이라면 검열을 일괄적으로

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 없이 사인(私人)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중략)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악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소자들 현실 외면한 판결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이 음성적으로 국가기관에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행 형법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 검열로 인해 사문화했다는 비판이 빚발쳐 결국 검열규정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에게 청원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다. 집필을 할 때는 언제나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집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고전 접수 단계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씨와 같은 일부 재소자들은 금지 2월의 징벌에 처할 위험을 무릅쓰고 출소자를 통해 허가 없이 서신을 기타 국가기관이나 법원, 인권단체에 발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형자는 언제나 제한 없이 편지를 발송하고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형 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 특정한 사람과의 서신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 (28조 2항) 서신의 검열 역시 명백한 위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변호인과의 문서교환, 연방 및 주의회와 의원에 대한 수형자의 서신은 검열대상에서 제외된다. (29조1,2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독일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

(김보영)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4년차 인권관련 지표 및 통계가 「2001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 풍부하게 실렸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info)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나 주제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02-741-5363/ 담당: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 법제사법위원회 총471쪽 24,550원
- 행정자치위원회 총357쪽 18,850원
- 외교통상위원회 총299쪽 15,950원
- 노동환경위원회 총204쪽 11,200원
- 보건복지위원회 총107쪽 6,350원
- 문화관광위원회 총 37쪽 2,850원
- 건설교통위원회 총 41쪽 3,050원
- 교육위원회 총104쪽 6,200원
- 국방위원회 총101쪽 6,050원
- (총액 95,050원)

환자생명 담보 약값 홍정

글리백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제약회사가 '글리백'에 대한 '전세계 단일가격 방침'을 고수하며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애꿎은 환자들만 곤경에 처해있다. '글리백'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등은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바티스는 조속히 보험약가 협상을 종결하고 글리백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 당국에 대해 △만성백혈병환자 보험적용 제외 철회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포함한 가격 인하 방법 강구 등도 함께 요구했다.

글리백의 공급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아래 복지부)가 글리백의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하면서부터. 당시 약값을 책정한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는 스위스 현지에서 글리백이 판매되는 가격(약 2만5천원)의 65%를 공장도 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을 합해 약값을 산정했다. 그러나 글리백을 공급하는 한국 노바티스는 "글리백 가격은 세계 공통이며 만약 보험약가대로 약품을 공급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고시가격을 어기며 병원과 약국에 글리백을 2만5천원에 공급했다. 이에 몇몇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글리백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병원이나 요양원들은 손해를 보면서 글리백을 1만7천원에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품 구입비 추가분을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시켰다.

백혈병 환자들은 노바티스의 '황포'와 추가된 경제적 부담에도 글리백을 먹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암세포를 죽이긴 위해선 글리백 이외의 약이 없기 때문. 이에 대해 프리첼 동호회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강주성씨는 "복지부가 고시한 약값도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노바티스는 유통안정과 품질 유지를 이유로 전세계 단일가격을 고집하고 있다"며 "약값이 높다고 품질이 유지되거나 유통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못박았다. 강씨는 "환자들이 다른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높은 약값을 고수하려는 노바티스의 황포"라고 해석했다.

민의련 정혜주 공공의약팀장은 "국내에 약 1천명 안팎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높은 약값으로 인해 이들이 글리백을 이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는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대상자 폭을 넓히고 글리백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태섭]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약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약법 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김대중 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국농성에는 철도노조 노동자 1백여 명이 동참해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 김갑수 조직국장은 "오고 싶지 않은 곳, 여의도까지 왔다"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자리에서 파업을 결단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번 농성은 경찰의 방해로 천막도 치지 못한 채 시작됐고, 정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범용]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① 아프간 파병동의안·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
- ② 쌀생산비 보장과 개방농정 철폐
- ③ 공기업 민영화 저지(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 ④ 중소기업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실시
- ⑤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 ⑥ 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 ⑦ 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 ⑧ 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 ⑨ 사립학교법 개정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5일째

오늘의 단식 : 명지대 웹진 '명지포문' 싸가지 씨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6일(목)

제 19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3개월간 차단했다가, 5일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곧바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5일 새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진영, 아래 동연)는 전국연합과 전농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 접속 차단 사실을 폭로하였다. 동연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이 1달 전부터 이들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접속이 되지 않자 의문을 갖고 지난주에 동연에서 중앙전산원에 문의한 결과,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조사단(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경 유현경 씨 등 형사 3명이 중앙전산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하였고, 중앙전산원 2층 실습실에 있던 문제의 컴퓨터를 3주 동안 압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실습실 관리자가 "게시물을 못 올리게 당분간 홈페이지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전화통화를 받았으며, 이에 캠퍼스망실장이 9월 11일 "전산원장에게 보고한 후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으며, 또한 자신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망실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전화를 받은 실습실 관리

자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이 수사를 나왔던 형사 3명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한다.

손쉬운 인터넷 통제

특히 캠퍼스망실장은 경찰 측에서 요청사실을 부인하자 결과적으로 "공문을 안 받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5일 오후 4시 30분경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학교규율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을 아동권리조약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의복장에 대한 규범 등 학생회칙이 '지도'를 넘어 '통제'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1. 들어가며 - 교칙분석의 목적/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 2. 교칙분석 -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
- 3. 마치며 - 대안적인 교칙 마련을 위하여

이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맹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택 이사장, 박원택 상임이사 등 기존 이사들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겨냥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3일전인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음 아님,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성낙돈 교수다. 성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인사규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성 교수 외에도, 올해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학교측에 의해 정계 회부된 교수 11명과 지난 9월 박원택 상임이사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 등 6명은 앞으로 승진·승급이 원천 봉쇄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된다.

이에 교수협의회 신상전 회장은 "박씨 족벌 재단이 학내 분규 과정에서 재단 측에 맞섰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보복조치로 이번에 인사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개악 내용은 전면 폐기돼야 하고 박원택, 김기주 등 기존 재단 측 이사들은 즉각 이사회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회당은 지난 3일 "덕성학원의 교원 인사규정 개악은 학원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교수들에 대한 보복조치임과 동시에, 덕성학원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오만한 계획"이라며 이사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교육부는 정원 7명 중 공석이 된 4명의 이사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석태 변호사 등을 파견했다. 이들 관선이사들은 구 이사장 등이 마련한 인사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덕성여대 정상화 의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심태섭]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채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에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기간을 단축하고 감치 결정에 앞서 감치 재판을 열어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감치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 측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심태섭]

테러방지법 청문회

일시 :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6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김상욱, 차영민, 민동원, 모승훈 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7일(금)

제 19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쟁쟁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뒤틀림을 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 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정부의 '보험료 인상·민간의보 도입' 계획 철학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위기

는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 구조의 의료체계 및 정부의 국고지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보험혜택은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직장 20%·지역 15%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40.6% 인상했고,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9%정도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약 1,400여 개의 일반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의약품 유통 개혁, MRI 등 보험적용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결국 '보험혜택 동결', '보험 적용 대상 축소',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

게다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는 도입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대위는 "민간의보 도입은 공보험을 위축시키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족한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민간의보 도입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대위는 1인시위(1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7일째
오늘의 단식 : 동덕여대 행동위원회 동춘과 짝두기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의 반성장치'인 국가인권위에는 출범부터 굳은 자물쇠가 채워졌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역사적인' 출범이란 말이 무색하게 사무처도 없이 간판을 내걸던 날, 인권위원들이 직접 진정접수에 나섰고 목마른 국민들의 우물 파는 줄은 길고도 길었다.

3년 내내 법무부의 책동에 시달리던 국가인권위법안은 '누더기'가 됐다는 혹평 속에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뒤이어 인권위원 밀실인선과 은밀하고 배타적으로 추진된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의 운영 행태 등이 비판대에 올랐다. 인권위를 적대시하는 관료집단의 저항과 국가인권위 준비 주체들의 비민주성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사회의 촉박 속에 국가인권위가 출범하기 바란다"는 인권단체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구로 순항하는 것은 일부 관료집단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여전한 소망이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의 높은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지하철 오이도 역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고장을 일으켜 70대 장애인 노부부가 사망과 중상이라는 비극을 당했다. 허술한 장애인 시설 관리 체계가 부른 사고였다. 이 소식을 접한 노들장애인야하 등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장애인의 묶인 발'의 실태는 충격이었다. 한 달에 한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중 16.6%에 달하고,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올 4월, 20여 개 장애인·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결성에 나섰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채 1호

선 철로에 뛰어들고, 지하철 연착을 부르는 승차투쟁을 하고, 버스를 점거하는 등 그들의 몸짓은 강경하고 처절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7월부터 시작한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12월 4일 현재까지 15만3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 '시해가 아닌 권리를 달라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의 '우리 사회 속으로의 승차'를 요구하는 투쟁이다.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4·10 경찰테러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 도로에서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대우차 해고노동자들을 집단폭행, 노동자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법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허가' 결정에 따라 노조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맨몸으로 연좌시위에 들어가자,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2월 16일 대우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부평사태'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2월 19일 강제 해산시킨 데 이어, 4월 중순까지 수만 명의 경찰병력을 부평 일대에 주둔시켜, 이른바 '유사계엄' 상태를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집회는 원천금지되었고, 초기 4주 동안 무려 671명이 연행되는 등, 무작위 연행과 불법구금이 판쳤다. 공장 내에 상주한 경찰병력은 일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철저히 감시했다. 이러한 사태가 급기야 4월 10일의 경찰테러로 폭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말 광주에서는 캐리어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가 전투경찰들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5월 울산 효성노조 파업현장에는 '흥기'를 소지한 용역강대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6월 여의도에서는 경찰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차량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부수는 등, 노동자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물리적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유엔, 한국의 사회권 종합 진단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이 국제인권의 무대에서도 깊은 우려를 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5월 11일 강도 높은 권고를 발표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6년만에 이뤄진 이번 권고는 IMF 체제 이후 사회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상태의 악화, 소득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21개 항목의 주요 우려사항을 열거했다.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노조에 대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2)

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회권 조약을 비준한 우리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유엔의 권고 채택 직후,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지자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엔의 최종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운동사회 반성폭력 논의 활발

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을 열어 반성폭력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운동의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다. 여성활동가들로 구성된 100인위원회는 지난 해 말 성폭력 사례 1차 공개를 한 데 이어 올해 2월 2차로 KBS 노조 전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의 공개와 함께 100인위원회는 가해자 실명공개와 피해자 중심주의란 자신들의 활동원칙이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에 부딪쳤다. 급기야 100인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소설가 박 모 씨와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 내지는 명예훼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운동사회 내에서도 가해자 실명공개는 운동의 대의와 단결을 앞세워 성폭력사건을 축소하기에 바쁜 운동종도 속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서서히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뜨면서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17년 만의 진실,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84년 의문사한 박영두 씨의 사인이 17년 만에 무덤 저 끝에서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25일, 1984년 청송

제 1보호감호소에서 의문사한 박 씨가 감호소 내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진 것이라 밝히고,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5공 당시 발생한 의문사가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타살로 인정된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전두환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미가 돼 80년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후 84년 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고문 속에 죽어간 박 씨의 죽음은 지난 세월 우리사회의 참담했던 인권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사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박 씨는 극악무도한 죄인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우리"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여전히 공식사회에 몸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97년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씨의 사인도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의 구타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이 김 씨의 후배를 매수, '프락치' 활동을 사주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겨줬다.

422일에 걸친 유가족들의 처절한 농성 속에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올 한해 83건에 대한 진정 및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 선전해왔지만 난항은 거듭되고 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협조 속에 조사시한이 내년 2월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반발로 민간조사관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자의 한숨과 넋들의 통곡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호령, '네 마음을 보여봐!'

2000년 말 정부가 '(국보법 개폐 등 개혁입법)연내 처리가 어렵다'며 뒤로 나자빠지자, 그해 12월 28일부터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에서 연말 연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보법은 1월 1일 송구영신 집회에 참여했던 전직 한총련 대의원을 체포하는 일로 2001년의 포문을 열어 그 '건재'함을 과시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4년여 수배생활 끝에 구속된 한총련 아들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유치장 상봉을 하고, 신라이 구속되어 신라 없는 '눈물의 결혼식'이 열리는 등 국보법의 횡포는 연중 계속되었다.

그중 국보법의 본질을 가장 유감 없이 드러낸 사건은 8월 24일 강정구 교수의 구속이었다.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민경대 방명록에 '민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 '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의 구속이후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데 집중되었다. '민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토론회'까지 들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3)

취내 그의 본심을 추적한 것이다. 국보법이 노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요, '내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 한 제벌은 처벌받지 않아도 강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보법이었다.

강 교수는 10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판은 계속되며 그의 '내심'을 열어 보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인터넷 검열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며 현실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시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의 검열체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단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해매체판정의 잣대가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과 유해매체여부와 상관없는 사이트까지도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

11월 9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의 폐쇄는 그 첫 케이스로 등장했다.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존은 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쳤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의 500여 홈페이지가 초유의 사이트 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사회단체들의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론화

매년 5백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군복무'가 아닌 '감옥살이'를 선택하고 있다. 올해 초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론화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물꼬를 튼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인권·평화운동과 만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4월 천정배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 원칙을 앞세우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 추진 안을 밝혔다. 그러나 반공과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은 즉각

반격을 받았다. 보수적인 기독교단은 성명서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이단 종파의 주장이라며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징병거부와 군대거부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트 폐쇄를 운영자에게 요청했다.

이는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한다. 올해 10월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1천 6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했으며, 9월 14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은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 레미콘 노동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70년대 예기가 싶은 요구를 내걸고 레미콘 노동자(전국건설운송노조)들은 싸웠다. 오랜 투쟁을 벌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4월 10일. 사업주들이 레미콘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와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파업농성마저도 구사대와 용역장패를 동원해 짓밟았다. 특히 레미콘 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이 그 선봉에 섰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뿐이었다. 대신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구속 11명, 불구속 60여명, 즉결 40여명. 이뿐 아니라 여의도공원에서 '노숙투쟁'을 하던 노동자들은 2000여명의 경찰이 휘두르는 해머와 도끼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150일 넘게 지속된 파업은 안타깝게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오랜 파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보류한 채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에게 사용자들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펼쳤다. 노동자들의 집단단식, 변호사·지식인 및 사회단체들의 농성, 한 노동자의 죽음도 공권력과 사업주의 질긴 유착을 끊어낼 순 없었던 것이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자신을 의지해야 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다. 바로 오늘도 한국통신계약직, 캐리어 사내하청, 인사이트 코리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달픈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8일(토)
제 19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처음 총성이 났을 때 이모 경사는 냉장고와 난로 사이에 있었고, 우리 남편은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모 경사에게 달려들었고, 곧바로 두 번째 총성이 났어요. 남편이 배를 움켜쥐며 문 밖으로 나와 쓰러졌는데, 배 양쪽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달 27일 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번달 3일 오전 사망한 권모 씨의 부인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했다. 경찰이 총을 발사하기까지 정말 순간의 일이었다는 것이 부인 정씨의 주장. 이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권 씨의 후배 심모 씨의 증언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27일 밤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을 때, 권 씨는 막 양치를 끝낸 후 집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권 씨는 "당신들이 여기 뭐 하러 왔소"라며 경찰들을 향해 대들려고 하자, 미리 와 있던 심 씨가 "아니, 형님! 왜 이러십니까?"하고 권 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순간 권 씨는 심 씨를 옆으로 밀쳤고, 그 바람에 심 씨는 권 씨의 뒤편으로 넘어졌다.

심 씨는 권 씨를 뒤로하고 바다에 쓰러진 뒤 일어서서 뒤돌아보기도 전에 총성이 두발 울렸다고 증언했다. 심 씨가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권 씨가 문 밖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 것. 결국 심 씨는 경찰들이 총을 쏜 순간을 목격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이 총을 사용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경우였을까? 정 씨나 심 씨의 증언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권 씨와 약 5분간 몸싸움이 있었고, 권 씨가 김모 경장의 총을 쏘려 하자 이모 경사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씨의 동문인 국제신문

이모 기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동한 경찰들이 권 씨와 5분간 몸싸움을 했다면 심 씨가 그 광경을 못 봤을 리 없다는 것. 또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 씨가 경찰로부터 '넘어졌다 일어서는 시간이 5분 정도 아니었냐'는 유도신문을 받았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발사된 총탄에 대해서도 경찰측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다. 애초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이라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라고 주장

이모 기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동한 경찰들이 권 씨와 5분간 몸싸움을 했다면 심 씨가 그 광경을 못 봤을 리 없다는 것. 또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 씨가 경찰로부터 '넘어졌다 일어서는 시간이 5분 정도 아니었냐'는 유도신문을 받았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53년이 되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이라 부르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절 구절을 되새김질하며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는 아픈 과병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무슨 상관이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안을 내미는 국정원의 속셈은 무엇이며,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부의 모순은 무엇이며,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와 버스 타기를 열망하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문턱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와 사람의 내심을 따져 묻는 국가보안법의 배짱은 어찌 같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와 레미콘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왜 그리 다른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인권의 날이다.

인권의 날은 번지르르한 기념식과 훈장으로 장식되는 날과는 다른 의미로 봐야 할 날이다. 이 날은 각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음을 재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을 정치적 선전물로 사용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선전물로서의 가치도 다했는지 이젠 인권의 구호조차 용도 폐기된 느낌이 들고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우리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사회 건설"을 내걸었던 때를 기억하라.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아스팔트 위에서 맞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데 최소한의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의 폐기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국정원의 신상엽 과장은 "현재의 법안은 테러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테러방지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 독점 및 권한 확대 △테러 및 테러단체의 불명확한 개념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테러방지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 법이 적용될 땐 그 문제들이 살아 꿈틀거릴 것"이라며 "이런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소수자들이 '테러' 분자로 몰려 대테러센터(국정원)에 의해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유를 희생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달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장 최용규 의원은 "여론의 높은 관심은 반민주적 법들이 날치기 통과됐던 과거의 악몽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며 법안의 날치기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으로의 법안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진주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총성을 두 번 들었다고 한다"고 따지자, 수사과장이 "공포탄은 불발이 된 것 같다"며 "현재 권총에 대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는 공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 측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공포탄 발사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총기남용'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권 씨를 '흥기난동범'으로 몰아갔다. 사건 다음날 아침 진주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권 씨는 후배인 정모 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맥주병을 깨

후배 정 씨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혔고 △부인 정 씨로부터는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흥기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왜곡하려는 경찰의 의도는 사건 직후 신문보도에 그대로 관철돼, 경남신문과 경남일보의 관련 기사는 권 씨를 '흥기난동범'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 정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모 경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인근 상대파출소에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 씨는 동네 방범대장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약10여 년간 역임해 평소 잘 아는 경찰들이 많다는 것. 부인 정 씨는 오히려 당시 상대파출소에 있던 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아들도 자신은 할머니와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부인 정 씨의 신고내용은 경찰이 사후에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었다.

국제신문 이 기사는 깨진 맥주병으로 목을 찔른 일에 대해 "권 씨와 정 씨가 모르는 사이였으면 모르겠으나 평소 잘 아는 사이에서는 술 마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경찰이 권 씨를 흥약범으로 몰아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사건발생 다음날 상대파출소 직원이 집으로 와서 갈세 자루를 가지고 갔다"면서, "권 씨가 아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물도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우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경찰에 의해 사후 조작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기관의 정정보도 및 국가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권 씨의 누명이라도 벗어 부인 정 씨와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기를 소박하게 바라고 있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1일(화)

제 19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수사 책임자였던 ㄱ씨는 "사건 직후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ㄴ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야무개 씨 등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중정 건물 7층 건물 바깥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어'라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ㄴ씨 말에 따르면 최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 교수에게 동승으로 구타,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 꿇리기,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보이며, 고문에 참여한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원회는 최 교수의 조사 및 죽음과 관련해 중정에서 작성한 5건의 문서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정, 조직적 은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수사관들은 최 교수가 고문 때문에 사망했거나 가사 상태에 놓이자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를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 도중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는 중정의 이제까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며, 중정이 최 교수의 타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중정에 의한 최 교수의 타살 및 조직적인 은폐와 관련해 이후라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당시 차장에게 소환조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12월 말 내

지 1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발표 내용을 접하고 "위원회가 선친의 죽음을 둘러싼 베일을 한꺼풀 벗긴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타살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담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의 눈썹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웠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사무처 구성이나 시행령에 탄축을 거는 탓에 조사 및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도 '태생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자회견 중 한 일간지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울산구치소 건은 인권단체의 일차 조사가 이뤄진 사례인데 인권단체를 동반하면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은 없는가.' 위원회 측의 답변은 "인권침해 진정에 관한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답변은 '진정에 관한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법 36조와 그에 앞선 31조를 따져볼 때 틀린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를 살려 대답할 수는 없었는가. '법의 한계는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위원회 스스로 진정에 관한 조사에서 인권단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인권단체들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돌파하는 것이 향후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 여겼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될 수록 법의 한계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그 한계에 안주하느냐 돌파하느냐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이주영]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48일째
오늘의 단식 : 충북대 직접행동그룹 발걸음 살구 씨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1일째
오늘의 단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준성 씨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

산타클로스트라야 줄 수 있는 선물?

심장병에 걸린 어린 딸아이가 있다. 수술을 하면 나를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하다. 청소부 리어카를 끌고 아버지가 일 나가면 숨쳐서 뛰어 놀지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어린 아이는 양지바른 담벽에 기대어 다른 아이들이 노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아버지가 돌아와 마주앉은 저녁상에는 콩자반과 김치 뿐,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애동안 맛있는 것조차 맛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해설과 함께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이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벽을 보고 며칠을 혼자 울었다. 험한 인생살이에 대한 두려움, 그 아이에 대한 연민, 내 부모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겹쳐져서 촉발된 감정이었을 것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53주년이자 '인권의 날'을 맞아 소위 인권운동가인 나는 연이은 인터뷰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언론사는 달라도 질문은 비슷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로 시작되어 "인권 문제의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로 이어지는 질문이었다. 앞의 질문은 우리 사회의 풍요와 각종 제도의 변화를, 뒤의 질문은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회권 보장의 문제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이 변화·확대되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 가는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버지는 사라졌을까?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치료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월 26만의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 등을 떠올리면 말문이 확 막히는 질문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당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에 넣기 위한 노력은 많은 산을 넘어야 했다. 많은 정부가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편적 인권에 포함시키는 걸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선언의 기초자 중 한사람이 '있던 권리를 빼는 일은 쉽지만 없던 권리를 나중에 새로 넣는 일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권의 삽입을 위해 버텼다는 후문이 있다. 많은 정부가 사회권에 대해 끼고 있는 팔짱을 풀지 않으려 하고, 사회권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산타클로스트라야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정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때라야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류은숙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1. 아프간 다음 제물은 누구?

미군, 아프간 잇단 오폭으로 민간인 2백여명 희생(12.3)/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 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등 확산경도(12.9)/ 북, '미국의 북 침공계획' 뉴욕 타임스의 보도 비난(12.9)

2. '미국'이 뛰니까 '이스라엘'도 뛰다.

이스라엘, 팔 자치정부 본부건물에 미사일 공격(12.3)->'테러와의 전쟁' 선언...팔 정부 테러지원조직으로 규정, 연이은 폭격공격(12.4)->팔 경찰본부 폭격...과격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압박(12.7)/ 미, "이스라엘 예전 자위권이 있다"(12.4)->'평화협상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된다.

두산중공업·사회보험 노조, 고용보장·원직복직 등 전면과업(12.3)/ 민주노총, 전농, 진민련 등 대국회 공동투쟁...쌀생산비 보장, 주5일근무제 등 9개 과제 요구, 8일까지 철야농성(12.4)/ 정부, 철도민영화법안 국회제출(12.4)/ 전농 등, 추곡수매가 동결방점 철회 대정부 투쟁 선언(12.5)/ 건강보험공대위 출범,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요구(12.6)/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총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레, "4·3 당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12.8)/ 서울지검,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수지갑 사건 관련 사전영장 청구(12.8)/ 의문사위, "당시 중정간부, 최종길 교수 타살 진술"(12.10)

5.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급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요구 명동성당 농성(12.3-8)/ 덕성여대 교수협·총학생회 등, 반인권적 인사 규정 규탄 기자회견(12.3)/ 서울대, 전국연합·전농 싸이트 3개월간 접속차단(12.5)

◎ 주요판결 및 통계

서울행정법원, '노조집회 지지연설 이유로 한 교수해고'는 부당(12.5)/ 서울지법, 인터넷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12.7)/ 컴퓨터 이용을 빈부차 여전... 4백50만원 이상 소득가구 73.3%에 비해 1백만원 미만 소득가구는 35.9%만 컴퓨터 사용가능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93년 9월 7일 창간한 인권하루소식의 2천호 발간(12/18)을 맞아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 드라이브'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부세력 중심의 집권 여당 내 소수 계파였던 김영삼의 국가권력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박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애초에 인권개선을 위한 청사진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93년은 인권실현에 대한 국민의 꿈이 다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과거청산과 '쿠데타적' 사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어둠의 한 시절을 종결"시켰다고 표방한 '문민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했다. 그러나 군사정권 시절의 해직자, 고문피해자들, 조작 '간첩'들, 42건의 의문사 사건, 종군위안부 등등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관심 밖에 있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김영삼 정부는 첫관부터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엉거주춤한 규정을 내리면서 처리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문민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쿠데타적'이라는 말은 비꼬아 처음으로 '문민적' 정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인권하루소식> 창간호(93, 9 7)였다.

'신 국가보안법 시대' 막이 오르다

93년은 재야운동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시국·공안사건이 1/4로 폭 떨어진 시기였다. 그럼에도 연말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03명을 헤아렸으며, 전체 시국·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비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994년 2월에 83.3%) 즉 93년은

'신 국가보안법 시대'를 예고하는 해였던 것이다. 울산대 조국 교수, 인권운동가 노태훈 씨, 이른바 '남매 간첩사건'의 김삼석·김은주 씨 그리고 pc통신 동호회에 토론자료를 올린 김형렬 씨 등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특히 김형렬 씨 사건은 우리 나라 최초의 pc통신 국가보안법사건으로 기록된다.

새로운 경향, 최초의 사건들

93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 시대'를 예고하는 해였다. 인권에 대한 '문민적' 정권의 무관심과 관계없이 새로운 유형의 인권사건, 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물결쳤다.

3월 19일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인 이인모 노인이 판문점을 통해 43년만에 고향인 북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후 장기수의 인도적 송환은 인권운동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 여성 인권분야에서 서울대 우 조교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공론화된 성희롱사건으로 기록된다. 여자 조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해온 신정후 교수에 대한 우 조교의 투쟁은 "직장 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라는 남성전국에 엄청난 충

격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성폭력방지법' 제정에의 길을 열게 된다. 또한 14년간 남편에게 구타당하며 살다 이 해 2월 남편 살해에 이른 이형자 씨 사건도 우리의 인권의식에 새 장을 여는 경험이었다.

한편 5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쐬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뛰니뛰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대거 국제인권분야에서 왔다.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13개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떴으며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인권운동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1993년 말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지겹도록 외쳐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문민적' 정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를 '학살'이 접게 된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인권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속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국제화한다.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인권을 논의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권보장 장치를 보유하면서 개별국가의 인권탄압을 압박하고 있다. 인권 NGO들의 국제연대 또한 이에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뜬것은 1993년 6월에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우리 인권운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운동방법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실 유엔이 마련한 여러 가지 장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때로 인권운동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성공은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 그밖에도 우리의 인권운동은 눈부신 속도로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을 활용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시대에 '국제편향'은 함정일 수도 있다. 인권운동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국내적 노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00.11.9. 선고 2000나 4078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금·폭행 및 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원고 조모 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담당 검사는 기자들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검사가 "피의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7년 당시, 기소된 조 씨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다수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2001년 12월 12일(수)

제 19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알권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은 10월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8월 '회시기밀 유출 사건', 7월 '구국전위 간첩사건' 등의 손해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다. [범용]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공단 본사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맞춰 개최된 것이다.

집회에서 건강보험공대위 신동근 운영위원장은 "지나해 12월 재정운영위는 보험료를 인상하며 MRI 검사 등 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병·의원 회계 감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재정운영위원회에는 다시금 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안이 상정돼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운영위원들이 보험료 인상 안에 반대해 오는 15일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신태섭]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0호 기념식 및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 송년의 밤"

- ▶ 여는 때: 2001년 12월 18일(화) 저녁 7시
- ▶ 여는 곳: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서울부페' (2000호 기념식을 마친 후, 저녁 8시부터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서울부페 02-762-6111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2일째
오늘의 단식 : 사회당 양명철 기획위원장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우루과이라운드'의 파도에 밀린 "국가경쟁력 강화!"의 아우성, 그리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마녀사냥의 공포... 보수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국민이 정신 없이 떠밀려간 그 광기의 세월을 우리는 '신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94년도 <인권하루소식>은 쏟아지는 공안사건들 속에서 지면부족에 늘 허우적거리야 했다.

'신 공안정국'이 왔다!

중등 교과서 개편안에 '10월항쟁', '4·3항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는 3월쯤에 보수언론들의 '이념서비'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이 '신 공안정국'의 서곡이었다. 뒤이어서 '이념서적'을 출판했다는 출판인들이 줄줄이 끌려간 4월에 노동부, 산자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 "산업현장에 침투한 좌경세력 색출"한다는 것이 결정사항이었다.

'신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은 6월 한총련 출범식부터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대규모 경찰병력이 대학과 파업장 곳곳에 투입됐고 6월 한달 동안 구속된 인원은 215명. '문민적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의 총 구속자수와 맞먹는 놀라운 수였다.

광기의 마녀사냥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조를 표시할 용의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신 공안정국'은 '주사파 사냥'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서강대 박홍 총장은 91년에 이어 또 '히트'를 쳤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북의)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이 유명한 발언이 있던 18일 전국 경찰은 한총련 학생 140명에 대한 긴급 검거령을 내렸고 그 다음 날에는 181개 대학 주변에 27,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곧이어 나온 박홍 시리즈 제2탄은 "북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였다. 대검 공안부는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학당국은 즉각 이 교재를 폐쇄했다. 그러나 이 교재를 집필한 9명의 교수는 농성으로 맞서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힘겹게 버티어 나갔다. 그것은 역시 공안세력의 무리수였던 것이다. 결국 장상환, 정진삼 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이후 '신 공안정국'은 수그러지기 시작한다. 1월부터 8월까지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긴급구속'된 건수는 무려 4만 2천 건이었다.

시야에 들어온 소박한 요구들

94년은 공안한파 가운데서도 새 시대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가 분출한 시기였다.

새해 1월에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에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그들의 요구를 공식화시켰다. 체불임금 지불, 산재 치료, 그리고 "때리지 마세요." 그들의 요구는 눈물겹도록 소박했다.

눈물겨운 요구는 또 있었다. "매월 받는 6만 5천원의 생계보호급여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월에 심창섭, 이금순 씨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폐교 반대운동은 비록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에게 '개발'의 죄악과 교육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사건이었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은 뒤이어 터지기 시작한 공직자들의 대형 부정 사건, '지존파' 식의 초강력범죄와 성수대교 붕괴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민이 공포 속에 94년을 보내고 갔을 때, 그 자리에는 완전히 실지를 회복한 공안세력이 다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고가 사회를 지배해왔다. 국가는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인 빈곤층에게 혜택을 '배부른' 것이라고 여겨왔다.

1994년의 생활보호법 위헌소송은 이러한 인식에 도전했다. 심창섭·이금순 씨 부부가 생활보호급여액이 헌법이 인정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급여액은 "굶주리고 헐벗음을 갖 벗어난 수준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 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장애인 최옥란 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 생계급여액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3일(목)

제 19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편안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내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힘을 모았다. 1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제2학생회관에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대표 문현준, 아래 노실사) 창립 대회가 있었다. 노실사는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따로 단체까지 만든 이유는 다름 아닌 현재 노숙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노숙인들은 제대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실사측 설명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쉼터의 경우 서울시의 편입예산으로 몇몇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노숙인들의 병원 진료카드에 ‘노숙자’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런 연유 때문에 노숙인 스스로 의료혜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노숙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진료카드’뿐이 아니다. 쉼터·복지관 등 각종 사회시설의 열악한 생활환경도 그 하나다. 노숙인들은 보통 한 명당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할 정도로 과밀수용되기 때문에 자기 계발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이 어려운 형편이다. 박용범 사무국장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노숙인들도 자기 공간이 확보돼야 희망을 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며 “집단 수용시설이 아닌 단기적 수용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인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박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 진출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숙인 사회시설은 그저 ‘노숙인 감금시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숙인들을 소극적인 ‘시혜’의 측면에서

만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사회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준비해 1년여만에 발족한 노실사는 현재 노숙인보호법 제정과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인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12일 현재까지 1천3여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았다.

또한 노숙인 시설 회보 ‘떨개둥이’를 공식 기관지로 정해 ‘노숙인 스스로의 권리 의식 고취’와 ‘노숙인 정책 제안’ 등을 주요하게 알리나갈 계획이다. 노실사 홈페이지는 freechal.com/homelessworker이며, 연락처는 02-929-1314(박용범 사무국장)이다. (심태섭)

클릭 인권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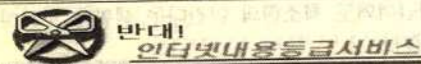
공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증언

산 자여 말하라 - 전 중앙정보부원의 양심선언

퍼낸이 최중선 / 퍼낸 곳 공동선 / 312쪽 / 2001년

최근 고 최중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씨의 죽음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중앙정보부 간부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최 교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최 교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살해로 규정했던 최 교수의 아우 최중선 씨는 양심선언문을 통해 그의 형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일하고 있던 최중선 씨는 사건정황을 철저히 기록하겠다는 집념으로 쇼크를 가감하여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최 교수가 죽음에 이르렀던 과정 ▲중앙정보부가 은폐·조작한 사건에 대한 반박 ▲죽음의 의문점과 견해 등을 생생히 남겼다. 최 씨는 형의 죽음을 70년대 초 유신이라는 공포정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의 행간을 살피다보면, 1981년까지 중앙정보부에 재직하는 동안 친형의 타살을 감지하면서도 어떠한 모욕과 고초를 무릅쓰고라도 그 안에 살아남아 죽음의 진상, 살인과 조작의 증거, 담당수사관을 찾아내고자 한 그의 집념이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전직 중앙정보부원으로서의 양심선언이고, 고해성사이며, 최교수 죽음의 진상을 알리고자한 보고서이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이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3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서대문갑 지구당 사무국장 정현정 외 3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보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법을 제정토록 강제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해방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초장기수 3명이 풀려났다. 이는 이후 초장기수를 비롯해 장기수의 전면적인 석방을 끌어내는 인권단체들의 1990년대 집요한 투쟁의 최초의 승리였다. 그러나, 해방 5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는 거의 제외되고,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돼 비난을 샀다. <인권하루소식>은 8회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는 장기수 캠페인을 전개하여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부여간첩 사건과 ‘불고지 정국’

1994년 대오를 다시 형성한 공안당국은 이른바 ‘부여간첩 감동식’과 관련된 ‘불고지 정국’을 조성, 이인영씨등 청년운동가들을 불고지 혐의로 연행했다. 안기부는 전국연합의 간부 박충렬, 김태연씨가 ‘간첩’혐의를 연행하여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해에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70명을 훌쩍 넘겨 ‘신공안정국’이 지속됨을 보여주게 된다.

극심한 노동탄압, 민주노총 건설

정권의 노동탄압은 어느 해보다 극심했지만, 노동운동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이라는 법외노조를 탄생시켰다. 한국통신노조는 정부의 공공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시장 대외개방 반대를 내걸고 준비투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를 김영삼 대통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

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 대거 연행하였다. 이에 종교계는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용 서강대 총장은 다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조종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은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기도하다 노동운동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당하기도 했다.

절박한 도시민민의 생존권 지키기

서울 금호지구의 박근혜 분신사건, 봉천동 전철순서 성폭행 사건, 인천 아암도 이덕인씨 사망 사건은 도시민민들의 생존권 지키기가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내 준 사건이다.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외면했던

것으로 인권하루소식은 이들 사건 현장을 지속적으로 취재, 폭로하면서 저준 등의 철거용역업체의 폭력성을 꾸준히 추적, 보도한다.

고문피해배상 등 의미있는 진전들 그 해 의미있는 인권의 진전도 있었다. 고문방지조약 가입 절차를 마치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김종경 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황석영씨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권고, 북경여성인권대회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출범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동성애자들의 연합단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지만, 여전히 공안세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지속되었던 힘겨운 나날로 점철되었던 한해였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임금, 향상적인 폭행, 성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이주노동자의 초보적인 인권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다.

이 농성을 계기로 노동상담소, 종교·사회단체들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도가 골격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이 제도가 낳은 이주노동자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차별이 아닌 차이의 존중이라는 인권의식과 관행의 실천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인권화두다. 한편 이주노동자운동에서 노동3권 확보 운동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4일(금)

제 19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현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부지청은 공소장에서 "공언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강철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기소 결정은 소설가 박모 씨가 100인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지검 서부지청(담당 감지원 검사)의 결정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청의 이같은 결정은 강 씨의 성폭력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법정 다툼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뿐 아니라 성폭력 사실 자체까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씨 관련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해 10월 KBS 노조의 여성활동가 2인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 각각은 지난 95년과 97년 자신들이 당했던 성추행 및

강간미수 사실을 노조에 알리고 정계를 요청했다. 성폭력특별법은 고소기간을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당시 성폭력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강 씨는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이 사건을 공개했던 100인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남부지청의 기소 결정에 대해 100인위는 12일 성명을 내 "피해자들이 법에 의지해 성폭력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차단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가

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기소한 자금의 사태는, 여성인권 보장에 무능한 우리 사회 법체계의 가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과정을 무시한 듯하다"고 이번 결정을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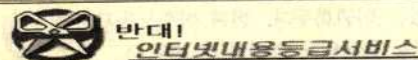
한편,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는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나라들에선 법조인을 양성할 때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사회에서 길러진 성차별적인 시각을 수정할 기회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법조인 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4일째
오늘의 단식 : 한림대학교 나재민 부총학생회장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문민정부' 4년째였던 96년, 이른바 '문민정부'는 8월 연세대 사태에 대한 초강경 진압과 9월 강릉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저항으로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 쇼'로 전락하였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사면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국내외 노동·인권단체들이 그토록 폐지하라고 요구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외면당한 기층 민중들의 안타까운 투쟁과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어느 해보다 가까이서 분노해야 했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가 1백50일 동안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는 동안, 사건을 처음부터 장례 때까지 줄곧 보도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 뒤에는 인천시의 거대한 개발용 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철거현장 고공철달이 철거용역원들의 방화와 파괴 속에서 무너져 내릴 때 철거민 신연숙 씨가 사망한 사건, 해고자들의 쇠사슬 농성, 산재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건 등 우리 사회 밑바닥 인생들의 힘겨운 생존권 투쟁을 작은 지면이나마 담아내려 애썼다.

95년 12월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를 받다 구속된 고애순 씨는 임신 8개월인 상황에도 구속적부심이 기각됐고, 결국 태아를 사산하고 말았다. <인권하루소식>은 2월 9일 이를 가장 먼저 취재해 알렸다. "모성에마저 짓밟은 사법부". 이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번져나가 결국 그녀의 재수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작은 신문이 할 수 있었던 너무도 큰 일이었다. 연세대생 노수석 씨가 검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하자 정부와 경찰은 노 씨의 죽음을 덮으려고만 했다. 이때 <인권하루소식>은 학생 동료들의 증언을 담아 진실을 알리려 했다.

그 해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은, 5천8백48명 연행, 4백65명 구속, 3천3백38명 불구속처리라는 초

행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는 생생한 사실조사를 통해 꾸준히 추적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이슈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연세대 사태에서 공안세력이 승기를 잡고 검찰이 공안세력의 수장으로 등장하면서,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의 주도로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고, 이듬해 80년대 식의 공안대책협의회로 거듭 났다. 그 해 12월 초에는 김형찬 씨가 안기부에 수배중인 자로 오인받아 연행돼 고문을 받은 후 이에 분신하여 항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6일 새벽 6시에는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른바 '문민정부'는 그 허울마저 벗어던진 채 이듬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향해 줄달음질쳐 갔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고등학생 복지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등 학생조직의 활동, 특히 두발자유화 운동, 학교운영위 참여 요구, '교칙을 찾자, 인권을 찾자' 캠페인 등 일련의 활동들이 주목받게 된다.

인권단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눈뜬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래 조약)'에 가입한 것이 1991년 이요, 그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1994년 말이었다. 그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전해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나서서 '조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인권이 국제적 최소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동관련 사업을 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애정과 보호'의 대상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권리의 주체'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아이들 인권의 각 분야를 망라한 민간단체 보고서가 95년 7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96년 위원회와 한국정부 대표단과의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이 이어졌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봉오리'가 맺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활짝 피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기만 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5일(토)

제 19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아예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 소련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주영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및 그 직계비속과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받은 자"로 수정했다. 곧이어 발의된 송석찬안도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문

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은 "법안 입안자들에게 '무국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

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험적 요소를 안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시급히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과거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 재일동포도 포함된다"며 조문 해석상의 문제로 돌렸다. 한편, 송석찬 의원실 강호경 비서관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문제지만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범용)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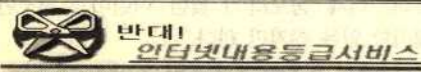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칭찬과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 최종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노력이 전자라면, 의문사 유가족들의 불신과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후자일 것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떠맡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에 대해 알고 있다. 한 사건의 의문사가 위원회에 진정되기까지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스러움과 저주와 원한을 담고 있다. 그런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잣대로 재단되기에는 너무도 큰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약한 권한과 시간적 제약, 인력의 불충분함을 안고 있는 위원회에 80여건 진정사건 모두를 해결하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출발한 위원회가 산처럼 무거운 역사적 과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률과 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들인 유가족과 민주단체들의 협조,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료를 갖고 있는 조사대상기관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고,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은 충분히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는 개별 사건의 관련자와 6차 원칙을 밝히는 일로 족하지 않다. 사건의 발생원인을 야기한 정치적 배경과 구조, 은폐조작 과정의 핵심라인도 밝혀야만 한 사건이라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녹화사업과 관련한 개별 사건의 진실만이 아니라 그 녹화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위원회가 결별해야 할 것은 성과에 매달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폭과 깊이 있는 진실 캐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뒤의 일은 정책적 과제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지금 위기의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5일째
오늘의 단식 : 친구사이 박철민 사무국장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달는 마지막 몸부림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과 연이어 발생한 한보 비리 및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97년 인권상황은 급속히 추락하는 김영삼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벽 날치기 잠재운 총파업

96년 말 노동법·안기부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개악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안기부법은 수사권 확대 등 안기부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97년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총파업과 함께 시작된다. 종교인, 지식인 그리고 시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계속된 24일간의 총파업에는 무려 36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으며 거리는 연일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대열로 넘쳐났다.

새벽 날치기를 잠재운 이 국민적 저항은 저항권의 의미를 국민의 가슴 깊이 새겼다는 점에서 인권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즉 두 달 동안의 '김빠기' 후 3월에 재개정된 노동법은 노동 측의 요구보다 오히려 자본측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한 것이었으며, 안기부법은 아예 재개정도 없이 넘어가버렸던 것이다. 2월 말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2%가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고 있었다.

공권력의 폭력 난무와 한총련 죽이기 공권력의 폭력은 97년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기록된다. 노동현장은 물론,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저준'과 같은 철거용역업체의 악랄한 폭력은 극에 달했다. 노점상인이 파출소에서 사망한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권하루소식>은 '파출소 가기 무섭다'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다(2, 12일자). 그러나 뉘나뉘나 해도 공권력의 조직적인 테러는 학생운동을 겨냥하고 있었다.

경찰에 봉쇄된 한총련 출법식 과정에서 돌출한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은 한총련 죽이기의 신호탄이었다. 6월 10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는 학생을 전원 구속하겠다고 공언했으며 9월 25일까지 한총련 5기 중앙대위원 1658명 중 319명을 구속하고 1333명을 탈퇴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한국의 학생운동은 거의 제기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레드 헌트>와 인권영화제의 드라마

97년에는 주로 비디오로 영화를 상영하는 중·소규모 영화제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강요하는 사전심의 때문에 속속 파행을 겪고 있었다. 97년에 제2회를 맞던 '인권영화제'는 "검열 거부"의 입장을 견지함

으로써 수난의 길을 택했다. 안기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은 인권영화제를 궤멸시키기 위한 온갖 압력을 행사했으며 급기야는 제주 4·3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면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인권하루소식> 1000호는 즉각 그의 구속 소식을 날렸고, 그와 별도로 모두 6번 호의를 발간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참여했으며 인권영화제의 끈은 원칙은 검열폐지 투쟁사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겼다.

1000호를 맞은 <인권하루소식>은 큰 시련 가운데 '문민 5년 인권정책 평가'라는 기획기사를 무려 16면 게재했다. 이른바 '문민정부' 인권의 실상을 낱알이 해부한 이 기획은 '개혁'이라는 거짓된 슬로건으로 한 시대를 지배하려다 비참하게 몰락한 독재자를 보내는 한편의 장송가 그 자체였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들어 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조건이 항상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쓰고 버리겠다'는 자본의 욕구가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는 사회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한 젊은이가 17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가 아닌 실직자 자활공동체를 찾아가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 이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 씨는 97년 봄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폐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5년째 매주 금요일 점심을 굶으며 한끼 식비를 모아 북한동포를 지원하고 있는 평화활동가다. 그는 또 '전쟁과 가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평소의 소망이 부처님의 삶과 일치함을 깨닫고 2년 전 불교에 귀의한 평범한 불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때는 지난 2월이다. 오 씨는 인터넷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수기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3년의 감옥생활과 출소 후 범죄자라는 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살인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당시 병역특례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오 씨의 존재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봉사하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했던 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해주는 밑거름이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늘 '부처님이 라면' 하는 불음을 던졌고, 지금도 총

칼을 들고 있는 부처님이란 상상할 수 없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오 씨는 결국 '불살생'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대해 확신했고, 이에 따라 "도저히 군사훈련과 징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오 씨는 "현대에는 병역의 의무가 군사훈련 등 협소한 의미를 넘어 서고 있다"며, "자신은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국가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

원, 예체능특기자 등 비전투 분야의 활동을 '병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비전투 분야의 병역활동에 대한 허용기준을 양심에 의한 것까지 확대하고 △이러한 병역의 폭을 넓혀 민간대체 봉사활동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날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찾아가 병역거부 사실을 알렸고, 앞으로는 서울 보문동의 한 실직자 자활공동체에서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한다.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일 오 씨는 입영기피자로 자동분류돼 형사고발된다. 이후 해당 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가 오면 자진 출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범용)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17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어렵게 말을 했다. 황 사무국장은 "지금은 관련 국가기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불행은 명확히 조사해 비극이 재발되는 걸 막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

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의문사가 아니라고 기각될 조짐이 보인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시한에 쫓겨 사건을 종결하면 나중에라도 진실을 규명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가족인 허영춘 씨는 "법에 한계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위원회는 이를 출몰 묵살했다"며 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영]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섹스 비디오든, 혼전 동거든, 마약이든 성 스캔들과 관련하여 피해 여성 연예인을 비난하는 주요 논거는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공인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옹호하는 시각은 "연예인도 공인 이전에 개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논쟁 구도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예인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다"식으로 언제나 절충을 가정한 공인론이 승리한다(나는 왜 연예인의 사생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인지, 왜 수 조원에 달하는 군수 비리나 의문사에는 알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다). 이처럼 공인론 대 사생활 보호론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논쟁 구조에서 후자는 백전백패다. 질문 방식 자체가 이미 공적 세계 우월론(남성 중심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말은 쓰지만, '남성의 사회 참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사회'는 남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만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세계라고 간주되는 가정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공적 세계로 나가야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

즉 같은 연예인, 정치인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도덕적 규범은 완전히 다르다. 남성 연예인의 정력(성적 쾌락), 혹은 정력에 대한 추구가 현재의 황수정씨 사건처럼 마녀사냥으로 이어질까? (물론 황씨의 최음제 발언은 미확인 추측 보도다) 남성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울거나 바지에 손을 넣고 인터뷰한다고 해서 가십 거리가 될까? 또한 개인의 사생활 범위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생활의 범위는 성별과 계급에 따라 다르다. 공사 분리에 근거한 성별 분업의 논리에서 보면, 남성은 공사 영역을 모두 경험하지만 여성이 공적 영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 시 여성 차별,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다 그런 문제들이다. 또한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겐 50평이 사생활권의 영역이지만, 9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겐 9평이 사생활 보호 공간이다.

내가 보기에 여성 연예인의 성 스캔들은 연예계의 '자정'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터질 것이다. 이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의 문제이며, (남성)대중은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차별적 규범은, 여성 연예인을 모델로 해 언제든 얼마든지 여성 개인이 가진 자원, 경제력, 사회적 힘과 상관없이 여성을 너무도 쉽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는, 계급을 초월한 남성들의 연대이다. 이같은 섹슈얼리티의 권력이 여성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정희진은 한국여성전환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씨도 타살 잠정결론(12.13)/ 기무사, 규명위의 자료요청 거부 알려져→의문사 유가족들, 기무사에 녹화 사업 및 강제집행 관련 군 의문사 진상규명 적극 협조 촉구(12.14)/ 의문사 유가족들, 규명위 위원장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법개정 촉구 농성 돌입(12.17)

3. 주한미군의 동베짱, "내 땅 내 맘대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SOFA개정국민행동 등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와 미군기지 반환 요구(12.10, 11)/ 국방부, 미군 아파트 허용 입장(12.13)/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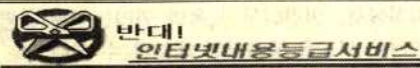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개최(12.12~14)

6. 지금은 전쟁 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엔, "미국 학전 시도 반대"(12.9)/ 파키스탄 일간지, '치료 중이던 탈레반 포로 70여명 반탈레반에 의해 학살' 보도(12.11)/ 국제적십자위·국제엠네스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촉구(12.11)

7. 기탁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로 직위 해제 방침(12.11)/ 교육부, 각 대학에 교수노조 참여교수 징계 지침(12.12)/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정 운동(12.12)

◎ 주요 판결 및 통계
북한이탈주민, 남쪽 생활에서 경제적문제(16.3%), 취업·직장생활(12.4%) 등 어려움(12.10)/ 외환위기 후,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32로 악화(12.11)/ 11월 20대 실업률 30만 5천명, 전달보다 3만9천명 증가(12.14)/ 3분기 대출-고졸가장 가구간 소득차 월 100만원 넘어(12.16)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8일째
오늘의 단식 :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 사무차장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인권하루소식> 2천호 발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를 2회에 걸쳐 실는다.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은 20일부터 이어진다. <편집자 주>

'미친 짓'이 현실로

"미친 짓이다", "하루하루의 지면을 채울 사건이 있겠는가?"

처음 일간으로 인권소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었다. "기사거리가 없으면 '오늘은 평화의 날'이라 하고 쉬지 뭐"하며 속 편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8년이 넘도록 지면을 채우고도 남질 만큼 <인권하루소식>(아래 <소식>)이 번창(?)하고 있는 현실은 '시대의 비극'이다.

<소식>의 모태는 이랬다. 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등장했다고 일선 언론에서 인권뉴스는 찬밥도 보통 찬밥이 아니었다. 사랑방은 만연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짙다고 판단, 소외된 목소리를 좀더 생생하고 크게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 당시 사랑방 활동가가 해외연락 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었다. 여러 날에 걸쳐 긴급 소식지를 사방팔방 팩스로 날렸다.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강력한 연대의 힘이 나왔다. 그 덕분에 '간첩'이라던 그는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공안담국의 체면치레 죄목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체험이 '팩스신문'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것이다. 준비 24호를 거쳐 93년 9월 7일 <소식>은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출발"하지만 "진실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창간사중)".

돈 없고 잠도 없다

"편집진이 24시간 내내 일하느라 일주일에 한번 퇴근이 힘들 정도로 시달린다는데, 인권보장을 외치는 단체에서 인권활동가의 인권유린이 웬말입니까! 인권소식 몰아내어 활동가 인권 쟁취하자(창간 격려문 중)"

"복사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족으로 <소식>제작에 대

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소식>에 실린 광고들 중)"

빈약한 재정과 취재환경에서 <소식>은 '독종'이 되어야 했다. 꼭 알려야 할 소식이 있으면 취재시간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에 24시간 내내 제작체계와 밤샘은 기본이었다. 한 예로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가 만기 출소한 것은 94년 8월 17일 새벽 4시 10분, 미리 지면을 비워놓은 채 대기하던 <소식>의 기자가 대전교도소 앞에서 강 씨를 인터뷰하고 송고한 출소 소감 기사가 가장 빠른 보도였다.

'신문' 대접해준 공보처

A4 용지 2-3쪽의 팩스신문을 '신문' 대접해준 것은 공보처였다. <소식>을 내고 얼마후 공보처는 '일간지인데 정기간행물등록법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정식으로 일간 신문으로 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또한 당시 서준식 발행인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신분인 서씨가 피보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사비도 있었다. 이에 <소식>은 "우리는 윤전기도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등록요청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냈다. 그후 공보처는 입을 다물었다.

얼굴 없는 독자들

밥을 새고도 <소식>의 제작이 늦어지는 날이 종종 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걸려오는 '얼굴 없는' 독자의 전화. "왜 아직 안나오는 겁니까?" 심중판구 경찰이거나 기관원이었다. <소식>을 동향보고의 뉴스자료로 삼는 그들에게 <소식>의 누장발간은 큰일이었나 보다. 기관원들은 '00상사'라거나 정체불명 단체의 이름을 빌어 구독을 계속했다. 93년 안기부 요원이 정식으로 구독요청을 해왔을 때 기자가 거절했다. 그리고 오간 대화, "발행인 좀 바꿔주세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그럼 안기부장하고 통화 좀 합시다. 그거 됩니까?"

(☞ 내일자에 계속)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 교육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인권교육을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로 확인했고, 인권교육은 유엔총회가 1994년 선포한 '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에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과목을 인권과목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어린이의 권리'라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94년부터 제기된다.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간영역에서 선보여왔고,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자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모아졌다.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수업내용에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을 넣을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그러나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의 인권교육도 미진한 형편이다. 95년 성공회대가 '인권과 평화'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대학인권교육은 여전히 극소수 대학에 머물러 있으며, 강좌가 있는 대학도 인권교재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제정되었고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와 권한사항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이에 인권의 개념을 설정하는 이론화 작업,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위의 구성,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①

'인권 문제 아닌 것이 없구나'

인권하루소식(아래 <소식>)을 볼 때마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같은 학교 선생님님 말씀수색을 받는 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현직 대통령으로 가진 우리의 현실인지라,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시사저키 오늘과 내일>과 맺었던 인연도 만만치 않지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몇년전 <소식>이 '민주연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 '인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겠죠. 팩스신문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인권하루소식을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회원 관리에도 CMS(자동이체)를 도입하시면 어떨지요. 건투를 빕니다. (이광조, CBS <시사저키 오늘과 내일> PD)

인권운동의 '고집'을 위하여

93년 8월 <소식>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따지도 많은데 세상은 도무지 무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매일 '팩스'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소식>은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정부와 또 인권에 무관심한 상업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확실히 <소식>은 인권운동에 유력한 하나의 무기로 기능했습니다. 불법 수사관행, 교문, 철거민, 양지마을 사건 등 은폐되어 지나칠 많은 일들이 하루소식을 통해 드러났고 이것이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권하루소식의 독심은 곧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어 '평화와인권'의 발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일간신문보다 먼저 <소식>을 살핍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밝히며 하루소식을 마감했을 동지들이 보입니다. 동시에 하루소식의 고민도 전해옵니다. 인터넷의 시대에 활자매체 인권소식지의 앞날은.. 인권운동의 칼날로서 <소식>의 가능성은..

술한 소식들의 홍수 속에서 <소식>이 여전히 읽히는 <소식>이 되기 위하여 더욱 전투적으로 더욱 날카롭게 인권운동의 '고집'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김영옥, 전북인권소식 주간 '평화와인권' 편집장)

'야문' 사람 만들기

내가 <소식>과 인연을 맺게 된게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생활성서라는 잡지에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쓴 글에서 '인권하루소식'이라는 팩스신문이 있다는 사실을 맨처음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신문은 발행인이 '나의 주장'이라는 책을 쓴 서준식 선생이라고 했다. 내눈이 번쩍 뜨였다. 무조건 전화를 해서 구독신청을 했다. 그때부터 우리집에는 새벽마다 팩스 울리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팩스 용지를 제때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편으로 전환했다.

그날그날의 소식을 접하진 못해도 한꺼번에 종이로 쓰여진 인권소식을 읽을 때마다 나는 늘 새로움과 함께 분노에 치밀기도 했다. 단언하건대, 정기구독하는 모든 매체 중 난 <소식>을 제일 기다리고 사랑하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지를 읽지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지경까지 되었으니, <소식>은 내게 세상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또하나의 선생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이다. <소식>을 보기 이전에는 사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이제 '인권'이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심에 놓는 또 하나의 '가치'가 되었다. 오늘도 <소식>이 날, 전라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야문

(용기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걸 난 느끼고 있다. 진짜 야문 사람이 되려면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사니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나같은 사람은 빛을 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건, 더이상 <소식>에 담을만한 기사가 없는 세상, 인권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누구나가 누구를 다 존중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공선옥, 소설가)

통일에 보탬 되는 <소식> 되길

한국군대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9·11사건이다 테러다 뭐다 하면서 무시 입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 그 사건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80년대부터 한국군대에서 잃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일만 오 천명 이상의 사병들이 녹화사업, 군기사고, 안전사고, 타살로 죽었습니다. 어느 군의문사 진상규명운동가 말처럼 한 해에 국지전이 한번 일어난 피해인데도 대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피와 재첩을 구분 못하게 하는 제국주의 여론조작에 놀아난 결과 몇 명 죽은 것은 간에 기별도 안기는 걸까요. 무서운 사회입니다.

테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통치하에 20년 이상 가랑눈 오듯 쌓인 게 일만 오천명 이상의 테러희생자인 한국군 사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 연합 군대 안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타당해 죽고, 깔려 죽고, 총에 죽고, 정신질환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에는 관심이 많은데 한·미 연합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테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인권단체와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같이 '가랑눈 오듯 쌓인' 잘 보이지 않는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사 합니다. 통일에 보탬이 되는 인권소식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김삼석, 군사평론가 '반값군대' 지은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19일(수)

제 20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생으로 들어온 아가스 씨는 서울 영등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한국에 오기 전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그건 연수생 제도의 겉포장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약속됐던 잔업수당은 없었다. 더구나 사후관리업체는 아가스 씨의 임금 5백달러 중 매월 2백 10달러를 떼 갔다.

당시 아가스 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저축의 일종이며, 연수생 제도를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로부터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기술도 배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도망가서 자유롭게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업장을 이탈했다. 이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를 택하는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아가스 씨는 그 후로 지금까지 돌 공장, 양계장, 아파트 문 코팅하는 사업장, 신문배달 등 가리지 않고 성실히 일을 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아가스 씨는 언제나 범죄자인 양 단속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

였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7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달 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추방했고, 10월 말 다시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 중엔 네팔

노동자들도 여럿 있다. 아가스 씨에게 남의 일 같을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아가스 씨는 말한다.

한편에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고 다른 한편에선 연수제단 이름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입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웅 목사는 "전체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가 65%, (=) 3면으로 이어짐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현재보다 2배로 부과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공동으로 청원하자는데 합의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사무실 밀집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또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다중의 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그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단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제8조의2 신설), 심지어 이를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1항6호 신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1백여 조합원은 18일 오전 11시 전경련 앞에서 경제5단체의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사무실 밀집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구호제창, 확성기 등 소음을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집회를 하란 말인가"며 개탄했다. 권 변호사는 개악안이 주간에 80dB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이 집회도 80dB 수준을 넘는다"며,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장기 위장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종희 의원실의 박성환 비서관은 경제5단체의 개악안 내용을 접하고 "우리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끝>

'보도'에서 '운동'으로 <인권하루소식> (이하 <소식>)은 보도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조직한다. 그것이 인권신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소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은 98년 대학가와 시위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다. 귀찮지만 불쾌하지만 감수하던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악법의 씨가 마를 때까지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97년 5월 13일 시평)'는 <소식>의 선동이었다.

발행인 없는 1천호 기념 행사

한총련 탈퇴 각서 강요, 그 태풍 한 가운데서 <소식>은 "한총련을 탈퇴하느니 탄압을 견디며 감옥에 감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키라"(97년 8월 6일)고 외친다. 서준식 전 발행인이 쓴 이 칼럼은 그의 구속으로 이어진다. 97년 11월 5일, 1천호 발간을 맞은 <소식>

의 머릿기사는 "양심수는 있다"였다. 당시 정치권에서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직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것이 발행인 구속의 표면적인 구실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칼럼이 공안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필화사건임이 드러났다. 발행인을 장안동 대공분실에 두고 치뤄진 1천호 기념행사장은 규탄대회장으로 바뀌었다. 잔인한 겨울이었다.

작은 신문, 큰 격려

"<소식>을 선정하는 감회는 각별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인권 전문 팩시밀리 일간지'가 우리 땅에서 간행되고 있다는 자부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식>의 기사들이 사실은 '제도' 언론 또는 '거대' 언론이 앞서 다뤄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는 데서 우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95년 북경 여성대회로 주목받게 된 이 '당연'한 구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권관 속에서는 공적 생활 속에서의 남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겨냥하고 그 속에서의 남성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성(性)에 근거하여 인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성에 대한 억압 지점으로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영역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인권'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변화는 생겨났다. 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의 문제 등에 덧붙여 성에 기초한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의미를 갖지 못했던 '성폭력'이란 말은 폭발적으로 노출된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를 근절하려는 여성·사회단체의 노력에 도전받게 되었다. 93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95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패소를 계기로 97년 개정됐고, 그해 가정폭력방지법도 제정되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놓여지게 되었다.

이후 여성인권의 지평은 확대를 거듭했다. 기업주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호주제 폐지운동 확산, 여성우선정리해고에 대한 집단소송, 여성노조 결성, 여성장애인연합 창립 등 새로운 영역의 여성운동이 등장했다.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인권을 보호·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성'을 따라 구조화되고 분배되는 세계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길은 멀기만 하다.

리는 특별한 부끄러움과 특별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민주언론선정 이유에서)

<소식>은 96년 11월 제6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선정한 민주언론선정 특별상, 2000년 12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선정한 '민주시민언론선정'을 수상한다.

팔 걷어붙인 고마운 '제주'들

"근 1년여의 궁리 속에 찾은 지면이 <소식>이라며 해성처럼 등장한 민화가 이동수 씨는 97년 8월 16일부터 '만화사랑방'을 게재, 인권만평의 지평을 열었다. 또한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기획의도로 97년 3월 4일 시작된 '인권시평'에는 지금까지 40여명의 필진들이 나서서 원고료 한푼 없는 <소식>에 성심성의껏 기고해 왔다.

세롭게 또 세롭게

팩스와 우편발송으로 시작된 <소식>은 전자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95년 12월 10일 컴퓨터통신서비스, 96년 6월 인터넷 서비스, 98년 10월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작한다. 창간 때부터 시작된 '사설'에 대한 고민은 2000년 1월 15일 시작된 '논평'계재로 뒤늦게 실현된다. <소식>의 나이먹음에 따라 얻은 특별한 열매도 있다. 5백호 발간기념으로 본격 운영하게 된 '인권정보자료실'과 3주년 발간 기념행사로 겹없이 구상한 '인권영화제'가 그것이다.

인권문제의 지형을 바꾼다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것만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한 때, <소식>은 사회권과 집단권을 포함하는 진보적 인권개념을 향했다. 때로는 '그것도 인권이냐'는 반문이나 지적이 되돌아왔다. 사실 확인의 끈질김과 인권 개념에 대한 탐구를 병행하며, 아동 인권과 국제 인권 등으로 관심을 확장시켰다. 앞으로도 <소식>은 인권문제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도전할 것이다. 인권침해 소식이 없는 '평화'의 그날까지!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알게 모르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진 신세가 많아 소감문을 부탁받았을 때에 넘죽 그러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워낙이 덕담과는 거리가 먼지라 원고지 3매 분량의 공간을 앞에 두고 한참을 끄적거렸다. 사실 이런 류의 글이란 게 뻔한 터이지만 인권의 파숫꾼이라는 둥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에는 성정이 그리 굽지 못하고, 2천호까지 채우는 피눈물 고생을 아는 처지에 이러니 저러니 하기에 천연덕스럽다.

돌이켜 보면, 처음 사랑방을 지을 때부터, 그리고 소식지의 고고성(그러나 사실은 무관심 속에 태어났다. 90년대 초반에야 누가 인권에 관심이 가졌나), 남영동 시절 기차길 옆 오막살이(이건 비유가 아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렸다)을 거쳐 온 갖 안팎의 불상사를 겪고 이제는 확고히 자리를 잡은 사랑방의 역사와 더불어 소식지는 한 시대를 드러내는 한 장짜리 큰 울림을 가진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는 방향전환을 모색할 때가 된 것도 아닐까. '메모' 일지 '지'(인권정치신문쯤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일지.

신세 갖기 위한 한마디는 꼭 말미에 넣어야겠다. 소식지 2만호제를 기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적 헌신성에만 기대는 것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압살하는 '폭거'다. '물'심 양면의 관심과 후원만이 작은 목소리를 더욱 알차게 만들 터이다. 다시 한번 2천호를 축하하며, 처음처럼.

(이공순, 전 한겨레신문 기자)

참된 민중 의식과 뜨거운 가슴

인권운동사랑방은 나에게 무척 소중한 합니다. 글로써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인권하루소식 기사 중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의 소리와 철거민의 힘겨운 싸움 등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참된 민중 의식과 그 뜨거운 가슴을 읽을 수 있어 저도 힘을 내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바랄 게 있다면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롯데호텔 노조원이나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에서 보여지듯, 지난해와 올해도 경찰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경이나 의경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간

부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기동단의 (시위진압 제 요령 및 실무 지침)은 시위자는 범법자라고 설명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이러한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용, 경찰폭력 피해자)

(=) 1면 '이주노동자' 기사에서 이어짐

연수생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수제도의 기형성을 보여준다고 하며, "그럼에도 연수제도가 유지되는 건 연수생들로부터 소개비, 강제적립금 등을 받으며 이득을 챙겨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득권 단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그는 믿기 때문이다.

한편, 18일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등은 서울 목동, 인천, 의정부, 부산 등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가졌다. 이후 집회대오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불법체류자 사면을 촉구하는 민원 서류를 청와대에 접수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민원 접수조차 무산됐다.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민원접수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주영)

뉴스고수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아직 2년이 남았다. 만화에서 보면 내공은 보통 10년 주기로 쌓이는 법이니까 10년을 채우기 전에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 볼 생각이다. 물론 텍스트로는 그 내공을 어찌 감당 할 수 있으리. 어찌다 운 좋게 만년설삼같은 영약을 먹지 않는 한... 그러나 참세상뉴스에겐 사진과 동영상에 있으니. 신념의 감자들에게 감히 도전장을 던진다. 팩스로는 사진과 동영상을 내보내기 어려우니...

- 인 :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 권 : 권리는 가진자들 만의 권리였던 이 땅에
 - 하 : 하루하루 전화선 타고
 - 괜한 눈, 부시시한 머리로 인권소식을 내보내던 사람들 있어
 - 루 : 누군가 알아 봤더니
 - 소 : 소리없이 강한 방
 - 식 : 식구들, 인권운동 사랑방, 하루소식 2000호 발간을 축하 합니다.
- (인권하루소식의 열혈팬, 참세상뉴스 팀장 batblue)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59일째
오늘의 단식 : 한양대 교육모임 edu_paper 김실, 이대 노동문제연구회 풀무 문은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20일(목)

제 20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총기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총 쏜 경찰과 수사를 담당할 경찰 사이의 주장이 잇갈려,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유족측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진주의 한 가정집 꽃가게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달 3일 사망한 권모씨에 관한 것이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12월 8일자).

진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본 기자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탄피 3개를 수거했으며 이 중 1개는 공포탄이고 2개는 실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을 쏜 이모 경사를 직접 만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이 경사는 당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쏘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기사건에서 경찰이 총을 몇 발 쏘았는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경찰수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측 발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측은 부인 정씨로부터 '남편 권씨가 아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출동한 김모 경장이 권씨에게 제압당해 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함께 출동했던 이경사가 어쩔 수 없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의문을 던졌다. 당시 경찰이 '아들이 칼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은 정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오 사무국장은 또 "정말 그 당시 총을 쏜 것 이외에 다른 조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까?" 하고 진지하게 반문했다.

이때 오 사무국장은 "당시 권씨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흉기나 그 무엇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모두 2명으로 총을 들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몽둥이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무장한 경찰 2명이 비무장한 1명을 제압하지 못해 총을 사용했다?" 그런 상황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고 오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지난 5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봤다. 화면에 의하면, 현장에는 화분 3~4개가 깨져 있었다. 사건 현장은 폭 1미터의 좁은 복도를 따라 화분이 계단식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만약 경찰측 주장대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곳에 있는 화분 모두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결국 오 사무국장은 "경찰측이 주장하는 식의 몸싸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17일 권씨의 동문단체 및 진주의 사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범용)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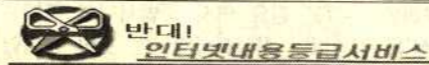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피낸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피넛넷 다산글방/ 319쪽/ 2001년

국경을 넘어 노동할 권리를 찾아나선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인권백서가 나왔다. 33만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이주노동자가 한국내 거주하고, 이주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10여 년이나 흐른 지금 이들은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

"짐승처럼 대접받고, 기계처럼 일하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불안한 삶 그 자체다. 백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제도적인 문제점을 낱낱히 밝히고 있다. 외노협 소속전국 28개 상담소에서 접수된 생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현실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여정에 인권백서는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60일째
오늘의 단식 :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 (오늘로 릴레이 단식 종료)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다. <인권하루소식> (이하 <소식>)은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나갔다.

벼랑끝 생존권, 고단한 민중의 삶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권대통령'의 발언은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쟁취해온 사회권 수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전주곡이었다. 2월에 등장한 '정리해고'라는 악령은 전국을 떠돌며 4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해냈다.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증가, 임금 삭감과 체불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민중의 빈곤화'가 철폐이 되는 사이,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단속, 부당노동행위와 철거폭력의 방지 등은 '국민의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식>은 노동현장과 거리를 누비며 '노동·생존권의 보장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주히 알려냈다.

양심에 대한 억압 지속

98년은 양심수 출신 대통령도 정권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양심에 대한 탄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입증해준 한해이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의 투쟁이 열리자 인권단체들과 양심수 가족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세계 최장기수였던 우용각씨(41년제 구금)를 비롯한 양심수들에게는 '체제전복 위협세력'이란 구시대적 낙인이 부여됐고, 특히 8·15 특사에서는 신(新) 사상전향제인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455명의 양심

수 중 94명만을 선별 석방했다.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를 지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가보안법은 그해 구속된 양심수 679명 가운데 55%를 잡아넣는 '실적'을 거뒀다. 꼬리를 문 각종 조직사건 가운데 특히 7월의 '영남위원회' 사건은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지지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터져나왔다. 국가보안법이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쳐주었다. <소식>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특집기사를 10회에 걸쳐 게재하는 한편, 준법서약제의 본질과 각종 조직사건의 배경을 파헤치며 양심을 수호하고자 했다.

음지를 뚫고 세상에 나온 양지마을
7월 인권단체들의 긴급현장조사로 드러난 양지마을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소식>은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이

란 특집기사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관련자의 처벌 등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대도' 조세형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청송교도소의 만행 등 전국 교도소에서 벌어진 각종 사망사건과 가혹행위, 출소자들의 법정투쟁 소식을 알려내는 것도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0일 서울대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 2월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의사사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진상조사단 설치,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의 확산' 등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준법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전향제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유지돼왔음을 정권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준법서약제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제도다. 대다수가 확인법인 양심수에 게 국가보안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전향제도와 다르다. 나아가 준법서약서의 제출 여부는 보안관찰 처분의 주요 잣대로 이용되어 풀려난 '양심'들을 다시 창살없는 감옥에 가둔다.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했던 송계호씨와 김태완씨가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99년 10월과 2000년 1월 각각 재수감된 사례는 준법서약제의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준법서약은 비단 양심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회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서약서, 경찰서에서 난무하는 반성문 강요 역시 준법서약의 또다른 얼굴이다. 갈릴레오에게 '천동설'을 강요했던 사상전향제도는 웃만 같아입은 채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21일(금)

제 20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이 강행된다면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정의 올바른 이해」(2001.7)라는 제목의 책자 84-86 쪽에서 확인된다. 민주당은 이 책자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인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역시 친특권층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지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

민간의보, 서민에게 그림의 떡

29개 노동·농민·보건·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민간의보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김 장관의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이같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공대위의 홍보담당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사무국장은 "김 장관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까지 어겨가며, 서민층은 엄두도 못 낼 고액의 민간의보 제도는 도입하려한다"며, "김 장관 스스로 친특권층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12월말 제3차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보 도입을 공언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의보 도입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의 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민간의보 도입에 따라 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는 소홀히 한 반면, 이제껏 민간보험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우 사무국장은 "태스크포스가 예초부터 민간의보를 찬성하는 학자,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병원협회 인사, 복지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이라며 민간의보 추진 논의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원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

또 공대위는 "요양기관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 많은 대형병원이 민간보험을 선호하고 건강보험과는 계약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돼 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앞에서 '민간의보 반대·보험료 인상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밀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

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

다. 또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국가검열에 대응하는 공대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성과로 지적했다.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변, 진민련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존'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었다.

한편 이날 마지막 단식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범용)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을 20일 시내에서 만났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위원회 활동시간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농성을 들어간 절박한 이유를 들어봤다.

◎ 최중길 교수 건 등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도 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이 되었다.”

◎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위원회가 사건을 철저히 조사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으니,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법적 요건만 내세워 기각을 일삼아 왔다. 몇 사건 빼고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각된다. 한번 기각되면 다시는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가해기관들은 위원회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장은 그런 기관들이 협조를 잘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가해기관을 감싸고돈다. TV에 나와서는 '녹화사업'을 정훈교육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이런 사람에게 사건을 맡길 수는 없다.”

◎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사하지 못하는 사건은 못하는 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적 권한의 강화를 요구해야 맞는 일이다. 강제소환권, 계좌추적권, 충분한 조사기간, 비밀 취급 인가증 발급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위원회가 가서는 안 된다.” (박래군)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레미콘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지난 5월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전국건설운동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레미콘노조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0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동성당 동계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투쟁은 지난 9월 당산철교 투쟁을 접은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숙투쟁에 돌입하기 직전 레미콘노조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노동행위 레미콘사업자 처벌 △부당해고 전면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검찰은 신속히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과 레미콘사업주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은 온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철야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경제위기 탓에 주어졌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란 면적부는 집권 1년이 지나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98년에 이어 99년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받아 목에 건 '인권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헌신' 서약에 계속 배신을 때렸다. <인권하루소식>에는 1년내내 각계의 분노가 넘실거린다.

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국보법·양심수, 21세기로 끌고가다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이나 8·15 사면이나 '준법서약서'의 고집으로 각각 43명, 56명의 양심수 석방에 그쳤다. 미결수는 전원 배제되었고,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도 생략되었다. 특히 8·15사면은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란 비난을 면할 길 없었다. 전체 양심수 중 22%만을 석방하면서 그것도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긴 사람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개정 집시법은 예상했던 대로 상습적인 집회금지과 집회방해를 일삼았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98년 말 시작된 유가협의 국회 앞 농성이 1년 동안 피눈물을 집어삼키고 12월 30일 끝났다. 12월 28일야 '민주화운동관련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문제를 잔뜩 안은 채 통과된 것이다. 두 법안에는 그토록 뜸들이던 김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설에 선뜻 1백억원을 국고지출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

지문날인 거부운동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시행된 강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항이 시작됐다.

99년 말 민중대회가 내건 국보법 철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중단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하고 민중대회 주최측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배신으로 점철된 99년은 저물어갔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의해 이어져왔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권력은 민간운동과 여론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여성 성폭력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광주특별법에 이어 의문사,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은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의 농성을 비롯한 집요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들 법률들에 의해 민간 합동의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갔으나, 그 법적인 한계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친일과 인명사전 편찬작업 등의 친일과 청산 문제, 삼청교육대 문제 등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제기된 한국전 시기 민간인학살 문제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거의 철저한 청산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지피는 일이기 때문이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과거의 문제는 언젠가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22일(토)

제 20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웅 목사는 이에 대해 "연수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고, 연수생 정원을 확대해 인력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들 밥그릇을 늘려 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1년 이후 계속 존속돼온 연수제는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연수' 없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연수생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쟁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아래 중기협) 등의 반대로 연수제 폐지 노력이 좌절을 겪어왔다.

또한 '대책'은 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선 눈감은 채 이탈자 수 줄이기와 불법체류자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퇴직적립금의 의무화는 정부가 나서서 연수생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란 비판이 높다.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은 "퇴직적립금은 그

동안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강제적립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 회도 성명을 내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립금을 강

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연수업체들은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임금 일부를 매월 원천공제해 은행에 적립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란 비난이 일면서, 최근엔 연수생의 의사를 묻는 쪽으로 상황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이 지부장은 "요즘도 불법체류자 단속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비관해 자살하는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영]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평범한 젊은이 오대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 씨는 입영해야 하는 날 논산훈련소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러한 부름을 거부해 온 집단은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붙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활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을 효과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것은 분명 국가에 의해 자행된 하나의 폭력이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수십년 동안 군대와 병역 앞에서 사실상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의 내면을 난도질해 왔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한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함으로써, 국가는 '이단'이라는 딱지 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오 씨의 존재는 '양심과 병역의 불완전한 동거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 씨는 이 사회를 향해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으면?"이란 물음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 왔다. 군대가 싫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인다는 등, 당신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 '에꼴은'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등,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모든 남성들이 너나할것없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등.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을 인정한다면 손 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오 씨가 던진 물음에 적절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고심외 고심 끝에 오 씨는 결국 양심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오 씨가 병역거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병역거부가 내면에서 우러나온 양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㉔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회 각계는 이 큰 두 가지 배경과 국민의 기대를 개혁의 호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호기'는 인권의 '참패'로 끝났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청산해야 했던 노근리 학살이나 매항리나 소파협상은 '유감'이란 상투어로 두결을 달았고, '의사폐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파위집단에게 짓밟힌 공권력의 자존심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호텔롯데 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에 달려 들었다. 군산 화재사건으로 1평 남짓한 쪽방의 석창살 속에서 생을 마감한 윤락여성들의 비참한 죽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생활고가 악화되면서 비관 자살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그들의 목소리는 새천년을 맞아서도 처연하기만 했다.

홍석천 커밍아웃

9월말 언론에 의해 동성애자로 폭로되어 방송출연 중지를 당한 홍석천 씨는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자"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되었고, 홍 씨의 사건은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매항리의 함성, 오만한 미국

1월 5일 파주미군기지 폭발물 설치 첩보를 접한 미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피리를 문 주한미군의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의 시동이었다. 오·폐수와 포르말린 무단 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가 잇따라 발각되었고, 매카시 상병의 한국여성 살해사건 등 범죄가 이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항리쿠니 사격장에 쏘던 관심은 인간띠 잇기, 맨몸으로 사격장 접거하기, 주민장례식과 주민증 반납 등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파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도 없었다.

공권력의 자존심?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해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폐업'이란 초유의 사태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 뒤 그 손

실분을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해 치료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웠다. 이처럼 파위집단에는 무력하기만 했던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결국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였다. 6월 29일 새벽 4시 호텔롯데 파업 경찰특공대 투입, 7월 1일 사회보험노조 강제집안은 경찰폭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공권력의 자존심(?)을 세웠다.

각각 국가보안법, 오락 국가인권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국보법 개폐논의는 총리와 민주당 대표의 '연내 개정 방침' 천명과 여야 의원 21명의 국보법 폐지법안의 공동발의로 박차를 가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라는 각계의 행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발언으로 시작된 수구세력의 반격과 민주당의 눈치보기는 국보법 개폐를 위한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야의원 95명이 공동발의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안'도 정쟁에 몰입한 정치권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결국 12월 28일 인권활동가들은 흑한기 노상단식농성에 나선다. 그것은 '인권대통령에 대한 최후통첩'이었다. 연말연시, '가라 국보법, 오락 국가인권위'의 구호는 눈발 속에 묻히고 개혁의 호기였던 2000년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㉔ 동성애자 인권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건전한 성문화의 하나이다" 99년 동성애자 33명이 교육부가 발행한 위와 같은 '윤리'와 '교련'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같이 금지하고 있다.

교과서와 같이 국가인권위법과의 천지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비약적으로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일상적인 '상식의 폭력'은 여전하다. '자신과 다름'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 배제하고 격리하는 '다수의 폭력'은 동성애자들이 꼭꼭 숨어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변화의 희망도 한편에는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는 1993년을 즈음하여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초기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조직되었다. 95년 6월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의 발족, 97년 노동자 총파업 집회의 무지개 깃발 등장, 98년 쿼어 영화제, 2000년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침묵은 죽음'이라며 국내 최초로 열린 동성애자들의 자금심 퍼레이드와 쿼어 문화 축제 등이 이어졌다.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려는 것"이라는 동성애자들의 '드러내기'와 일련의 투쟁은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중요한 인권의 화두로 만들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25일(화)

제 20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내 지문을 돌려달라”며 윤현식 씨 등 2백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열손가락 지문원지 반환·폐지’ 청구가 끝내 거부당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민들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지문의 원지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이 허락한 적도 없고 고지받은 적도 없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십지문 원지의 반환·폐지를 청구했다. <관련 기사: 11월 7일자, 22일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아래 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이전에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고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지도 않고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폐기·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인 자격이 없고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청구인 윤현식 씨는 “청구인 중 이마리오 씨가 이미 자기 정보의 열람을 청구했다”면서, “다른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이 씨와 같을 경우 이들도 열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씨는 또 “우리는 보유정보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

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반환·폐지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주체에게 고지를 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경찰청이 십지문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도 레미콘노조가 합법이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씨는 검찰이 주무부서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자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데 이어,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권의

한편 경찰청은 이번 십지문원지 반환·폐지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 거부의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청구를 접수한 지 15일째인 지난 5일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를 이유로 정정기간을 1차례 연기한 것.

윤 씨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백명 전원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결과에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용)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독점적 운반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는 등 일방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콘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는 전제로 사용자에 대해 성립되는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중앙노동위는 경기북부 신성레미콘 및 구로 제일레미콘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판정을 내렸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판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 사무차장은 특히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 독점적 운반계약 등은 레미콘 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레미콘업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레미콘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노숙투쟁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오는 31일에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법용)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㉑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는 <인권하루소식> 올 초의 평가를 김대중정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에 8.5배이던 것이 올해는 9배로 또다시 뛰었다. 국가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권기구들조차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했다.

‘민생공안’에 짓밟힌 민생

2월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을 선포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은 민생불안 요소이므로 척결하겠다는 것. 결국 짓밟힌 것은 민중의 생존권이였다. 2월 19일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강제 진압당한 이후, 부평 지역에 선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 연행 등 ‘유사계엄’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4월 10일엔 부평공장 앞에서 전투경찰 병력이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카메라 앵글에 피가 펴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경찰도 처벌받지 않았다. 6월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을 앞두고 ‘가뭄 땀 파업 안된다’는 신종 논리를 개발해냈고, 7월 서울 경찰청과 서울지검은 ‘도심지 집회를 제한하겠다’, ‘집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등 말발을 일삼았다.

병역거부권, 장애인이동권 앞으로

매년 5백여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에 따라 ‘군대’가 아닌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사회에서 올해 최초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단은 이단종파의 주장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국방부는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격을 시도했다. 12월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새로운 전기가 펼쳐질 가능성을 희망케 했다.

한편, 1월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운동에 불을 당겼다.

테러방지법, 국정원 부활 음모

국정원은 9.11 테러 이후 세계적 공안 분위기를 틈타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식>은 법안이 테러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악용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렸다. 국정원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국회 정보위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저지투쟁도 숨가쁘게 이어져, 결국은 법안의 율해 안 통과를 막아냈다.

국가인권위 출범부터 난항

11월 26일 만 3년 여의 논란 끝에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첫날, 장애인의 승진차별부터 구치소 내 의문사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명했다. 하지만 출범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적대시하는 관료집단의 저항으로 파행을 겪었다.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직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속셈. 현재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령과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난항을 겪었다. 84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 씨, 97년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김준배 씨의 사인을 규명해낸 것은 귀중한 성과다. 하지만 턱없이 미약한 위원회의 법적권한과 시간적 제약은 권력기관들의 비협조와 배짱을 용인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

기대를 모으며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가인권보장의 틀조차 권력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쳐 갑갑한 현실을 더욱 실감케 하는 가운데, 2001년은 한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㉑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게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채 1호선 철로에 뛰어들고, 버스를 접거하는 등 직접 행동을 감행하며 사회의 뒤늦은 관심을 끌어냈다. 하지만 지하철 편의시설 증설, 저상버스 도입 등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뿌리깊은 차별적 관행에 있다.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선거참여를 제한한 일 등은 대표적 사례. 지난해 8월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술을 갖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다 비관해 자살한 일도 있다. 올해 11월엔 한 장애인 보건의가 부당하게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일도 세상에 알려졌다.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3%대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28.4%에 이르는 현실은 차별의 높은 벽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인권을 누리기 위해선 끊임없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2월 27일(목)
제 20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2001년 중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소련·동유럽의 몰락은 이 지구상에 미국의 일원적 군사패권을 가져왔다. 그 결과 과거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 구축된 반공 군사정권들은 용도폐기의 운명에 처하게 되고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년대의 지구에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린다. '인권'의 눈으로 본 90년대의 한국은 떠나가는 국가보안법과 도래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한총련이 여전히 '이적단체'의 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분명하다. 냉전은 끝났어도 냉전구조는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의 방북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들의 대규모 상봉, 심지어는 국가원수의 방북과 정상회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끝내 과거의 독기를 회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실적으로 온갖 인권침해 위에 존재하는 기독교층에 맞서 '국가'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 그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아직도 불신과 설렘이 교차하는 '미지의 세계'일 밖에 없는 것이다.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원회

이것은 작년 겨울 흑한의 명동성당 노상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벌인 단식투쟁의 구호였다. 거기에는 낡은 시대를 떠나보내고 새 시대를 맞으려는 인권운동가들의 희망이 서려 있었다.

물론 역사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상당한 기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 인권의 향상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이른바 국가이익과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한국 인권운동 최대의 '화두'였음에 틀림없다.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2년 1월 3~5일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세해에는 1월 8일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되십시오.

국가보안법 몰락을 향한 긴 여로

20세기 마지막 10년간, 냉전시대의 마왕 국가보안법은 그 긴 생명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여로에 접어들다. 91년의 UN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그 출발점이었고, 북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는 '자본'의 요구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남한 대중에게 갑자기 초라해진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이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국민은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악법'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었다. 93년 이후 UN에서의 한국 국가보안법 논의는 활발해지고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었다. 98년에 절정에 달했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90년대에도 여전히 부패·무능 정권의 출만한 도구였다. 이 점은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통해 해마다 평균 370건 가량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신과 설렘

한편 93년에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은 UN이 회원국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국내의 인권수준을 국제인권기준에 접근시키기 위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 역시 냉전질서 붕괴와 더불어 현실화된 이 제도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는 '복음' 바로 그것이었다.

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될 운명에서 구해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세운 것은 3년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끈질기고도 처절한 노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모로 우리의 인권상황에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빈약한 조사권과 권고적 효과만을 가지는 위원회가 얼마만큼 인권운동가의 소망을 실현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현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흐름과 쟁점

1. 외면당하는 건강권...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공급했다. 이에 민의연 등은 글리벡 가격을 더욱 낮추라고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상정했고(12.13), 복지부 위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12.14), 복지부 장관 김원경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2.20). 한편,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은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중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해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가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규명위가 피진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점거했다(12.17~22). 이후 규명위는 미흡한 조사권한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고(12.22), 유가족들은 농성을 풀었다(12.22). 유가족들은 개정안 마련, 조사 중간발표 등을 촉구하며, '개혁이 미비할 경우 진정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12.24).

3. 이주노동자는 소망한다,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다"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다.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했고(12.5), 이주노동자지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규탄대회를 가졌다(12.16~18). 이에 앞서 기사연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직접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12.20). 관련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12.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12.18).

4. 인권단체들의 작은 항전, 테러방지법 연내 국회통과 저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1인 시위(~12.8)와 진정서 제출(12.10) 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이 계속돼 테러방지법의 연내 제정은 무산됐다.

◎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1993년> '문민적' 인권개선, 짝수 노오랬다(12.11)
- <1994년>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귀(12.12)
- <1995년>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12.13)
- <1996년>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12.14)
- <1997년>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12.15)
- <1998년> IMF 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둘러러 선 '인권'(12.20)
- <1999년>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12.21)
- <2000년>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까지 저버린 개혁의 기대(12.22)
- <2001년> 공안세력의 부활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12.25)

논평

- 인권의 날을 맞아(12.8)
- 의문사규명위의 결단을 요구한다(12.15)
-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10.22)

인권이야기

-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12.4/이계수)
- 산타클로스야 줄 수 있는 선물(12.11/류은숙)
-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12.18/정희진)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12.5)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보고서(12.6)
- 산 자여 말하라
- 전 중앙정보부원의 양심선언(12.13)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12.20)

기획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 ①국제 인권(12.11)
- ②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2.12)
- ③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12.13)
- ④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12.14)
- ⑤노동권(12.15)
- ⑥인권 교육(12.18)
- ⑦여성의 인권(12.19)
- ⑧'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12.20)
- ⑨과거청산(12.21)
- ⑩동성애자 인권(12.22)
- ⑪장애인 인권(12.25)

2001년 인권 10대 뉴스

- 국가인권위, 부실한 출범 큰 소망
-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4·10 경찰테러
- 유엔, 한국의 사회권 존중 진단
- 운동사회 반성록려 논의 활발
- 17년만의 진실,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 국가보안법의 효령, '네 마음을 보여봐!'
-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론화
- 인간성을 향한 투쟁 - 레미콘 노동자

